

제420회 국회  
(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13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현안 질의

### 상정된 안건

1. 현안 질의 ..... 2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명복을 비는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비극적인 참사를 마주하며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실 유가족분들은 물론 당시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활동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셨던 김상욱 위원님께서 오늘 자로 사임 되셨고 농해수위에서 이만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 되셨습니다.

보임 인사를 드려야 하나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인사는 다음 회의에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 현안 질의

(10시14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현안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가 최고의 공권력에 의한 법치주의 훼손과 법치주의 부정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감당해야 될 책무는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조차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는 순간 국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지켜 온 소중한 민주주의의 기둥도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최고 공권력에 의해서 제기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뼈아픈 교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조치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2월 29일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피해 구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모경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종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시작할게요.

○양부남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오늘 사실 우리 회의의 주된 내용이 12·3 비상계엄 관련된 그런 건인데요. 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국수본인 것 같은데 오늘 국수본 관계자가 지금 한 사람도 여기에 출석을 안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출석토록 해야 저희들이 제대로 또 필요한 사항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불출석 사유를 갖다가 쪽 보기는 봤는데 여러 가지 수사의 어떤 영향 등 이런 내용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여기 계신 증인들 어느 누구도 굳이 출석 안 해도, 불출석사유서 내 가지고 출석 안 해도 질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국수본 관계자 누군가는 와서, 꼭 국수본부장이 못 오면 대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최근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관련해서 도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도주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스페인 대사원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물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본 위원회 의결로 서울시에 스페인 대사원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물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 위원 자료 요청 건인데요. 본 위원이 12월 2일부터 6일까지의 서울청 교통순찰대 무전망, 용산서 무전망의 녹취록 자료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일부분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위장 출퇴근 의혹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원본에 대한 자료 요구가 필요합니다. 원본에 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저도 경찰청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투입된 경찰 인원이 약 120명인데요, 이 가운데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파견해 준 인원은 57명이라고 저희들이 국수본 방문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한 전체 경찰 인력 및 파견 인력 현황과 파견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파견을 제외한 상당수의 경찰 인력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투입되었다 하는데 소속과 임무 등 현황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법적 근거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9일 국가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도권 4개 경찰청, 서울·경기남북부·인천에 공문을 보내서 4개 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인원, 반부패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약 1000여 명의 인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혹시 보도된 게 맞다면 당시 보냈던 공문을 포함해서 2차 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

공수처와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대규모 경력 투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참담한 심정인데요.

지금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용산에 뿌리를 틀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온 국민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난달 7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서 12·3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기로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발송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으며 적법 절차를 통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마저 대통령경호처를 활용해서 방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심지어 윤석열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경호처에 무력 사용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루하고 찌질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이미 김용현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수사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괴 수사를 통해 내란의 진상을 낱알이 밝혀 내고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의 윤석열, 제3의 전두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모여 적법한 탄핵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그날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한남동으로 달려간 위원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김종양 위원, 정동만 위원, 이달희 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탄핵 방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 국회의원과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요 현안 질의는 내란 사태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있습니다. 헌법 준수라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통해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위원은 내란 사건 수사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저로 달려가 내란수괴의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위원의 퇴장을 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도를 넘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들이고요.

저급한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 주기를 단호히 얘기합니다.

○박정현 위원 뭐가 저급한 정치 공세입니까? 예? 가지 않았습니까?

○이달희 위원 말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종양 위원** 들으세요. 지금 이야기할 때 저희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조용히 시켜 주세요. 박정현 위원 발언할 때 정말 듣기 거북했어도 저희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조은희 위원**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등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위원으로서 경찰이나 공권력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도 없습니다. 정말 저급한 정치 공세입니다.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를 호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 집회 현장에 참석한 것은 정치적 야심을 위해 탄핵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선전·선동 아닙니까? 공권력에 보여 주는 위세나 위력 아닙니까?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집회 현장에 다녀온 것을 두고 억측하기 전에 실제로 경찰과 국수본과 민주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휴대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한 이 자리의 이상식 위원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부당거래 의혹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께서는 행안위원으로서 경찰과 소통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안위원으로서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 영향을 줬다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고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위원들은 내로남불입니다.

정부 여당은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소수 여당으로 저희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고 괴담적인 프레임을 세워 상대 진영을 폄하하지 말고 행안위는 행안위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정치 복원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대로 조치해 주시고 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수본 관계자, 본부장이 아니면 최소한 그다음 차석이라도, 또 지금 직접적으로 체포영장 집행과 업무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지휘해야 될 사람이 아닌 한에서는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두 번째로는 양부남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내란 음모 관련해 가지고 연관돼 있는 각종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남동의 CCTV 영상과 또 서울청의 통신기록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경찰청에서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삭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록의 원본들을 제출해 주셔야지 이 문제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달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공식 파견 인력의 현황과 법적 근거 역시 성실

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함께 질의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정현 위원님과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국회 밖의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견해이면서 또 이 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참고하실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고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지 않겠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 발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회의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울시입니다, 경찰청이 아니고 서울시.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양부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 자료는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할 수 없다면 그의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 가지고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회의 관련 자료는 최소한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경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은 직무대행으로서 경찰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경찰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직무대행께서는 80년대, 90년대의 공포 대상이었던 백골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부 알고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혹시 직무대행께서도 그 백골단이, 또는 주변에 백골단의 역할에 종사했던 분이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경종 위원 백골단 자체가 시위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쇠 파이프 들고 시민들에게 몽둥이질 가하고 날아 차기 하고 머리채 잡고……

사실 저 같은 세대, 저희 세대는 백골단이라는 것의 존재를 잘 모르고 몰라 왔고 본격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합성한 사진이 아니라요 실제 있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하얀색 헬멧을 쓰고 있던 이들이 경찰이었지요, 직무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모경종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찰의 수장으로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 백골단이라는 명칭은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

북기동대를 가칭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사실은 백골단이라는 명칭은 경찰이 운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머리에 모자 쓴 것, 헬멧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백골단이라고 지칭되는 것 같습니다.

○모경종 위원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행위들, 지금 보시다시피 시민들을 두드려 패고 발로 차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심지어 영안실을 뚫고 가 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주검을 탈취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지요.

그런데 이 국가 폭력의 최전선에 있던 백골단이라는 존재가, 방금 경찰에서는 그 명칭 자체를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1월 9일에 이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하얀색 헬멧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하면서 반공청년단 이런 이름을 가진 단체가 국민의 힘 김민전 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공청년단 예하부대로 백골단을 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을 감시하겠다고, 체포를 저지하겠다고,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진 보시지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봤더니 이렇게 관저 주변을 스스로 감시하고 하얀색 헬멧을 쓰고 체포 저지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다는 뭐라고 써 놔면 심지어 자기들이 백골단의 부활이다라고 직접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단순히 그냥 삼삼오오 모여 있는 단체가 아니라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전략 전술을 쓰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런 단체들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을 때 경찰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잘 협의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잘 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현재 지금 국수본의 이야기라고 살짝 한발 뒤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직무대행님. 스스로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행범이 맞습니다.

○모경종 위원 현행범을 경찰이 눈앞에서 목도하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현재 지금 관저 주변에는 경찰기동대 배치되어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배치돼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공수처와 국수본, 그러니까 특수본에다가 책임을 넘기는 듯이 제가 들었는데 그 이전 단계에서 또는 그 단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바로 경찰이 나서서 그걸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다만 그 기동대는 현장에서 집회·시위 관리나 혼잡 경비 이런 질서유지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고……

○모경종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질서, 그러니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분명히 체포영장 집행은 국수본하고 공수처에서……

○모경종 위원 직무대행님, 그러니까요. 질서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준동을 막아야 되는 것이 경찰의 역할임을 제가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단체로 이렇게 집회·시위 개념, 집합 개념에서 움직인다면 일부 저지할 수 있겠지만……

○모경종 위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질문드리지요, 그러면.

좀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 저지를 천명하고 관저 앞에 가서 서 있었어요. 정말 평소에는 제가 존경했던 의원님들조차도, 제 앞에 계신 위원님조차도 체포 저지를 외치며 그 앞에 있었습니다, 실제 체포 저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할 때 이분들이 다시 가서 체포 저지 행동을 한다면 이 역시 현행범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체포 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말조심하세요!

○옹혜인 위원 뭘 말조심을 해요?

○모경종 위원 뭘 말조심합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정춘생 위원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경종 위원 다음……

○조승환 위원 아니, 체포 저지를 하느냐, 양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지 거기에 있다는 것만 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옹혜인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모경종 위원 체포 저지를 실질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고 현행범이라고 원칙적인 대답을 하는 건데도 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찢리는 게 많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광희 위원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

○조은희 위원 대행은 대답을 조심하세요!

○이광희 위원 조은희 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모경종 위원 직무대행님, 대답 아주 정확히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흔히 우리 경찰을 거리의 판사라고도 합니다. 국민과 가장 근접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공권력, 최후의 보루이고 가장 친근한 공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법 집행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찰 출신 의원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국수본에 방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훗날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훗날을 생각하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직무대행께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훗날을 생각하셔야지요, 직무대행님’ 이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당시 현장에는 저도 참석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언급 내용



은 듣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들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경찰의 어떤 분에게라도 ‘훗날을 생각해야지요’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말 신중하고 민감한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 방해의 목적이 있고 외압의 목적이 있고 협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장으로서 정말 단호하게 차단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에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법 집행을 정말 엄격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국수본에게 맡겨 놓을 문제만이 아니라 경찰 전체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님,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국수본에서 엄정하게 집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지난 5일 날 공수처가 경찰에 달랑 팩스로, 뜬금없이 ‘앞으로 체포 관련해서 지휘를 하겠다. 경찰은 체포를 해라. 위임해라’ 이런 팩스를 보낸 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치육의 날이라고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 법적 미비로 못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법적 미비로 못 보내겠다 하면서 지금 경찰의 국수본,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행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구체……

○**조은희 위원** 현재 국수본의 특별수사단,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특별수사는 경찰 국수본부장 본인이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게 불법 조직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에 의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특별히 중시되는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를 두게 돼 있는데 특별수사단을 마음대로 설치를 하고, 보통 특별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겸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수사단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만 받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지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경찰 치육의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있지요.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관에 동원 지시 공문을 하달한 겁니다. 지금 이런 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사본부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를 받아야 되는 수사본부장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하고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

저는 오늘 국가수사본부장이 출석을 안 하면서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데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서 답하는 것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지난번에는 왜 나왔습니까? 지난번에는 동료 위원의 질의 사항에 수사상 기밀까지 누설하지 않았습니까?

국수본부장은 보통 여야 합의가 되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오실 때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부르니까 왔어요. 오늘은 여당이 야당과 합의해서 나오라 그러니까 못 나오겠대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할 때는 나오고 본인이 불리할 때는 안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이 부르면 나오고 국민의힘이 부르면 안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근거 없는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특별수사단이 국수본 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되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특별수사본부는 본부장이 직접, 본인이 본부 단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법이나……

○**조은희 위원** 지금 특별수사본부입니까, 특별수사단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특별수사단입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는 괜찮고 단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본부장이 직접…… 본부에서 그 밑에 수사단을 만드는, 경무관급이나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고요. 이걸 본부장이 직접 단장이 돼서 본인이 직접 수사 지휘, 그게 경찰법이나……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법에도 다……

○**조은희 위원** 없습니다, 경찰법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법 16조에 보시면……

○**조은희 위원** 다음에까지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불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지난 2일 날 경찰이 공수처에 대통령 영장 집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4일 동안 57명을 파견 보냅니다. 제가 국수본부장한테 무슨 근거로 파견했냐 그러니까 ‘공조본으로 파견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의해서 파견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경찰이 저한테 보낸 근거는요 경찰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바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30조인데요—파견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장님, 협의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으로는 1년 이상 파견인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 기관에서 합의만 하면 파견이 가능……

○**조은희 위원** 합의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양 기관이라 함은 경찰청과 파견을 받는 기관, 두 기관이 합의

만 하면 파견이 가능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40명의 수사관을 공수처에 파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57명을 파견했고 앞으로 수도권 형사기동대 전부 다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이 근거는 뭘니까,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조하고 44조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사 협조하고 또 수사의 특성에 따라서 파견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40명인데 왜 더 파견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시적으로 수사의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조은희 위원 이거 위법한 파견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누구 잣대로 그렇게 파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바람이 불기 전에도 일부 경찰이 그냥 늙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경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될 경찰이……

지금 국수본부장은 부당한 수사 행위라고 안 나오고 또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는 수사 기밀까지 유출하고, 그렇게 하고. 파견도 근거가 없는데 파견을 하고,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일 동안 파견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할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차장님, 지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업무 협조 내지는 인력 파견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는데 위원님과 차장의 답변 내용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은희 위원 오전에 제출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고양시갑 김성희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의결을 좀 요청드리는데요,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에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 플랫폼 로그 기록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행정안전부 내부에 이미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 의결을 하면 제출을 할 것 같은, 왜 그런 절차를 계속 거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구를 하니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시 제목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성희 위원** 예, 잠시만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 플랫폼 로그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미 자료 다 만들어 놔는데 의결을 해야 주겠다고 하니까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신정훈**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일단 지난번에, 아까 전에 관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 40명 모여 계실 때 김기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영장은 당연히 무효로서 이걸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압수수색영장 관련해서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이 다시 나왔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저희들은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 영장 불법인데라고 저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집행한 다음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만약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저지를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집행을 한 다음에 법적으로 다뤄 봐서 영장이 무효가 돼서 증거가 무효가 되는 건 모르겠지만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지할 권리는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수명하고 체포적부심이나 이런 쪽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어제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호처 간부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이것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경호처가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이라는 게 주먹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부 다른 보도에 보니까 중화기 얘기도 나오고, 이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결국 폭력으로 저항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경호처가 사용할 수 있는 무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총기라든지 둔기, 무엇이 됐든 이걸 사용해서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또는 치사죄가 되겠지요, 물론 인명 사고가 당연히 안 나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침 8시에 열린 3급·4급 회의에서 경호처 수뇌부들을 상대로 한 중간 간부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참석자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그러니까 집행을 저지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저항한 걸로 봐서는, 이 경호처라는 조직이 워낙 굉장히 상명하복 조직인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의 요구가 상당히 부당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 영장 저지가 공무집행방해라는 내부 게시망의 글, 김성훈 경호차장이 삭제하라고 했는데 내부 반발로 하루 만에 복원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김성훈 차장에게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지금 굉장히 안에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얘기들은 김성훈 차장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경호처 내부에서, 이분들도 공무원이니깐요.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처 내부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면 경호처의 명령을 불복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협박을 한다는데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거를 막는 게, 직무유기죄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논리상으로 성립하는 얘기입니까? 공무원은 안 따라도 되나요,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따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여기 형법 20조에 보장된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이런 경우에 경호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이걸 처벌할 수 없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는 국수본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 위원** 저는 경찰 일반에게 여쭙보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는데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야,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직무유기야’라고 했으면 그걸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시겠냐고 경찰인 차장님께 여쭙보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고 직무유기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 상황이 나와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야 답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등의 부당한 지시대로 집행을 저지했던 사람들이 2차에서 협조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53조 등에 따라서 정상참작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뭐 그것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금 경호처 직원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 이러한 문제들, 즉 영장 집행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직무유기라서 나는 안 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형법에는 여러 가지 감경이나 감면 사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수본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형법 53조에는 정상참작감경이라고 해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물론 이건 판사에게 해당되는 조항이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경호처와 무력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도 이와 비슷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유혈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본인들 소신대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영장 집행에 순응·협조하는 것, 이것이 공직자의 기본 태도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의 영장, 공수처하고 국수본의 영장 집행이 적법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적법한 것이라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적법한 것이라는 가정하에 따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 되나요? 적법하지 않은데 공수처랑 국수본이 막 움직이고 지금 경찰청에서 인력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닙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답변이 그렇게 됐다면 그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적법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경호처 직원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경찰의 영장 집행에 순응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태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원장 신정훈 답변 좀 더,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고 이 엄중한 상황, 특히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국가 공권력, 일부의 공권력, 그러니까 전직이라 할지라도 또 현직이라 할지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복종해야 될 이 공권력에 대해서 입장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에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은 차장님이 좌고우면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지금 말씀이 굉장히 좌고우면해요.

영장이 불법적인 영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없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당연히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다시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영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떤 공직자라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력을 사용하라, 중화기 내지는

칼을 사용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공권력을 지휘하고 감독 관리하는 경찰의 수장으로서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무력을 사용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뿐만이 아니라 스크럼이라든가 이런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특수공무 집행방해라고 본인이 규정하면서도 또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지금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호처의 직원들이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저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청 차장 질의하겠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 나 보고 있어요. 저를 봐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자료 볼 필요 없어.

1차 영장 집행 때 수방사 예하에 있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사병들이 1차 영장 집행에 동원됐나 여부가 언론에 보도됐지요? 알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이런 불법행위에 동원된 여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는 이런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러한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동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동원됐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 몇 명이나 동원됐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국수본의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이러한 동원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된 사실까지는 말씀할 수 있는데 몇 명이 동원됐는지 여부는 국수본 상황이라 말씀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런 취지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다음, 경찰에는 101경비단·202경비단·22경비단이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난번 1차 영장 집행 때 최상목 집행대행이 서울경찰청에 경찰력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직접 지휘라기보다는 경호처의 요청을 저한테 전달하는 형식의

요청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그러면 어떤 경비단을 동원,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101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202하고 101……

○양부남 위원 202를 지원 요청해 달라고 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101하고 202?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101하고 202 지원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경호처장한테 거절을 명확히 했고요. 그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양부남 위원 거절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거절한 이유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영장 집행은 적법한 것이고 적법한 영장 집행에 경찰이 저지하는 거는……

○양부남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비단 중에서 그날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일에 동원된 경찰력이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없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 세 부대의 단장들도 경찰에서 조사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마 국수본에서 참고인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모르시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세 번째는……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양부남 위원님, 지금 국수본의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신정훈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예.

수사기획처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기획조정관……

○위원장 신정훈 기획조정관.

○양부남 위원 나오세요 방금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 사병 동원 문제에 대해서 55경비단장과 33군사경찰대장을 경찰에서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몇 명이 동원돼서 확인됐는지……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장께서는 지금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현장지도·점검 중이시고요. 저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사실 수사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101경비단·202경비단·22경비단에서도 실제로 1차 영장 집행 때 동원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수사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그다음에 경찰에서 채증한 26명 경호처 직원들,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공문을 보냈지요? 신원 확인에 대해서 자료 받았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그 부분도 제가 언론 보도만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경찰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답변을 아직 못 받았어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다음 박종준 경호처장을 조사했잖아요.

지금 긴급체포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사직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검에서는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박종준 처장도 비록 사직을 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똑같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신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김성훈 차장과 기타 수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서, 신청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2차 집행과 관련해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양부남 위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은 세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됐습니다. 1차 집행이 1차 발부가 됐고 두 번째,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집행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대상은 되지만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경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경호 요건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때 경호 요건이 발동되는 것인데 이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경호 요건이 되지 않아서 경호처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저지를 하면 불법한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2차 영장 집행 때 이것을 방해한 사람은 모두 다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 시민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꼭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직무유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 명확히 나타났잖아요. 부당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다,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경우에는 따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비록 상사의 직무 명령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명령, 더욱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따르면 범법 행위가 되고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2차 집행 때 유혈 사태가 되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그저께 윤석열 씨가 지시한 내용을 추론해 보면 일부 강경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무력 행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무력을 행사하면 경찰과 공수처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장을 확고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청장님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무력을 사용한다’면이라고 하는 양부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영장 집행에 관해서는……

○**위원장 신정훈** 무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추론해 보면 상당히 국가에, 그야말로 계획상의 내란이 실제상의 내란으로 번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 총수, 소위 말해 경찰청장의 직무대행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단지 수사 방해 차원을 넘잖아요. 무력을 사용한다면 경찰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세요.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답변 듣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물리적 충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공수처하고 국수본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재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청장,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공수처하고 국수본이 담당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주셔야지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자기 입장이라고 생각돼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장 신정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경찰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그것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때 상

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집행은 국수본의 고유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하세요.

○조은희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경호처에서 무력을 사용한다’……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가정…… 언론 보도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현안 질의 때 공수처장에게 대통령 도피설 피담의 진원지 아냐 물었더니,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공수처장이나 전부 언론 보고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가정을 전제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정을 전제로,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삼가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드리고요.

경찰청도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답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가정된 상황을 전제로 가스라이팅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경호처의 무력 사용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실제로 현재 경호처가 보여 주는 모습이 무력 사용의 근거지요. 어제 경호처 대테러팀의 무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가방에는 흥기가 들어 있는 걸로 추측되는 것들을 다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와 국수본에서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스크럼을 짜고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호처에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무력시위가 아니면 뭐가 무력시위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호처 내부의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있는 주체는, 윤석열 씨가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을 가스라이팅시켜서 사병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의사진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본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포영장에 대한 저항 이권 명백히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되고 또 지금 현재 법원이 다시 재차 확인한 영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권력을 보호하고 공권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될 당사자들이 그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어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였던 일부 경호처 직원들의 무장한 모습들, 우리 국민들에게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그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국가가 불행한 사태로 번지지 않는 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요.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임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가정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발생한 내란 사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앞서 나가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에게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에게 시그널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청 차장 이외에 누가 있어요, 직무대행 이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력 상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국수본에서 또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계획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국민을 향해서 그런, 소위 말해서 법질서를 지켜야 될 당사자들이 무력시위한다든가 언어로써 협박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광희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방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들이 무력 사용을 하려 한다는 언론사의 발언만 듣고 가스라이팅을 계속 경찰 쪽에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장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발언 자체가 윤석열이 11일 날 오찬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불안은 그쪽에 있는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총기 사용이든 무력 사용이든 뭘 할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다, 무력 사용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듯이 발언을 하시면 뭐가 무력……

무장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그게 아닙니까? 총기 소유 사실에 대해서 공공연히 밝히고 어떤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주는 게 그게 무력 사용이 아닙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사과하시고 넘어가야 그다음 얘기가 된다.

지금 우리 야당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극한적인 사태는 최대한 좀 막아 보자, 이것에 근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마치 사병처럼 경비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영장이 집행돼 있는데?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지요.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지요.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행님, 많이 힘드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닙니다.

○**김종양 위원** 위기 상황에 조직도 추스려야 하고 밀려오는 현안에 대한 현명한 대처도 고민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호영 치안정감답지 않게 대행 된 이후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몸을 많이 사린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모습 기대합니다.

대행께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법과 원칙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법과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고 일부, 특히 민주노총과 같은 그런 집단에게도 똑같이 엄정한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최근의 어떤 일련의 집회에 있어 가지고 민주노총과 같은 그런 세력에게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진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지난 연말 전농총 주최 집회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가지고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저 상황은 1월 4일 날 한남동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가 경찰 무전기를 뺏아 가지고 경찰관에게 던져 가지고 상해를 가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장님, 저 민주노총 집회에서 다친 경찰관은 지금 복귀를 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마가 한 3cm 정도 찢어졌는데요. 봉합수술하고 복귀 여부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내부망에 보니까 경찰관이 저런 폭행을,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 등등의 어떤 그런 글들이,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사법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국수본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사실 저런 사안은 바로 긴급체포해 가지고 구속영장, 구속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경찰이 갖고 있는 무전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가한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을 볼 때 사실 직무대행께서 가장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법과 원칙인데

과연 저런 민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세력들의 집회·시위의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집회의 그 주최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앞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경찰관의 폭행이나 아니면 차로 점거 등 불법 시위가 빈번해지는 것 같으면 그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안은 우리 사회 안정의 기본입니다. 흔들리는 땅 위에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듯이 치안이 흔들리면 국정도, 민생경제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찰의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 한번 올려 주시지요.

여기 계신 분 중의 한 분이 지난 1월 7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국수본의 어떤 수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이 관련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이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1월 9일 날 본회의에서는 나경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저걸 갖다가 확인도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이후에 확인했습니다.

○**김종양 위원** 저게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답변 준비하면서 저것도 준비 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좀 의아해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다. 대책회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수사 기밀이 될 수 있는 체포영장 발부 시점까지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국수본과 경찰을 격려, 응원, 조언까지 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를 갖다가 옮긴 의원은, 의원에 관한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내용이 사실 국수본과 정치인 간의 내통이나 짬짜미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도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감찰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통한 그 경찰관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그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수본이 발표하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칫 지금까지 쪽 진행되고 있는 국수본의 수사가 특정 정당의 어떤 지시라든지 특정 정당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들한테 그런 내용의 진상이 뭐라는 걸 갖다가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국수본 보고받기로는 총경 이상에서는 서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고발돼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찰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왜냐하면 올린 의원님께서 허위의 사실을 올릴 리가 없잖아요. 조심해서 아마 올렸을 거고 그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줄여 가지고 올리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신뢰에, 수사의 신뢰에, 공정성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의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지금도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돼 있는 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공당인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 며칠 전부터 계속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호영 차장님, 체포영장 불법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요,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불법, 적법은……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부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 보호를 위해서 경력을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신 거지요? 이게 합법적이니까, 영장 집행이 합법적이니까 거부하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호처장의 요청이 왔는데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하셨습니다.

경찰특공대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에서 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소속인 서울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찰청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차 영장 집행을 하면 윤석열이 무력 사용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경호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고. 그리고 경호처 내부에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에 본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특공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거나 국수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투입을 하실 건가요? 투입을 하셔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요청이 온다는 가정하에 하는데 국수본에서도 요청이 현재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왜냐하면 자체 인력이 수사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국민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특공대 투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하면 지난번 1차 체포영장 발부할 때 대통령 관저 앞에 46개의 기동대와 2800여 명의 기동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기동대들을 관저로 투입하지 않아서 이게 불발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이면 기동대 투입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당시 영장 집행은 공수처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경찰은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박정현 위원 그런데 경찰직무 응원법에 보면 돌발사태 진압 또는 특수지구 경비를 위해서 기동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당일 날 보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또 바리케이드도 굉장히 심하게 쳤고 그래서 관저 진입을 막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돌발사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각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차 영장 집행 시에 이게 혹시 모를 인명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경찰이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셔야지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공수처하고 국수본에서, 공수처도 인원이 수도권만 해도 몇천 명이 있고요, 충분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다음에 기동대 문제는……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안으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기동대는 사실은 3000명 내외가 항상 배치되는데요, 한 1만명 정도가 양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충돌 방지에 저희들이 3000명이 하는 데도 좀 버거운 입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도 더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기동 차관님, 요즘 보니까 내란 선동 유튜브들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PPT를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니까, PPT를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안 되나요?

한 보수 유튜브를 보니까 12월 한 달간 1억 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아마 슈퍼챗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육박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슈퍼챗을 통해서 받는 것 외에 채널에서 계좌 후원을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PPT를 보여 주세요.

보여 주시면, 채널 하단에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요. 공개하는 것도 공개하는 거지만 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내용도 지금 어쨌든 내란을 옹호하거나 공수처와 국수본의 법 집행을 조롱하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버들이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기부금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안부에 등록된 유튜브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PPT에 보시면 기부금품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경우는 모집 목적, 목표액, 모집 방법 등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행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됩니다. 지금 알기로 등록된 유튜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확인하셔서 기부금품의 명확한 성격을 규정하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촛불행동 강제수사도 이 내용 때문에 강제수사를 당한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셔야지, 행정안전부가 보수 유튜버들의 돈놀이를 방관하셔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일주일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아까 존경하는 모경중 위원의 질의에 백골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그 당시에는 좀 들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경찰이 기억하는 백골단하고 80년대를 살았던 국민들이 기억하는 백골단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골단의 모습입니다. 청 자켓 그리고 흰색 헬멧 그리고 쇠파이프 이것들이 백골단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정권의 상징,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1991년 4월 명지대 학생이던 강경대 열사는 철근이 든 죽도와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성균관대 학생이던 김귀정 열사는 현장에서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질식사했습니다. 충무로 대한극장 앞입니다. 그 현장에 바로 저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공포,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한진중공업의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열사의 장례식장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시신을 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 독재정권의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이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 백골단의 부활을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직무대행님, 백골단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은 내란 동조 그리고 공권력에 맞서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정춘생 위원 지금도 한남동 관저를 지키면서 윤석열 체포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까지는 그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철저한 법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민회의 전당인 국회에 백골단을 끌어들이는 김민전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도 백골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후 사정을 몰랐다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학 박사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백골단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알아서 했다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를 연상시키는 윤석열 친위부대까지 등장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두고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체포, 더 이상 시간을 늦추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지난 10일 김민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김민전 의원 징계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명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님 나와 주세요.

지난 6일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총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본부장과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의 적합성과 적법성과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누가 판단합니까? 국민의힘이 판단합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법원에서……

○정춘생 위원 내란 범죄 윤석열이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정춘생 위원 법원이 판단하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생 위원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거잖아요. 적법하게 영장 집행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단호하게 대처를 못 하십니까? 무려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을 갔다고, 체포 저지하겠다고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영장 집행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만약 민간인들이 거기 가서 방해를 한다면 현행법으로 체포하십시오.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알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국수본은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물론 윤석열 체포 업무의 핵심 기관입니다. 국수본의 신뢰성과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흔들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고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경호처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공무집행방해를 언급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경호처 내부에서도 내란수괴의 수호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들과 12일 오찬을 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켜 달라고 무력 사용을 지시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여기며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인생을 지켜 줄 겁니까? 부화수행으로 처벌받으면 연금도 못 받게 됩니다. 그 인생을 윤석열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책임져 주실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지금 매우 너무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무력 사용까지도 선동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1시간도 늦출 수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저도 집회·시위에 나가서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토요일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매우매우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영장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님, 오늘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 양 진영 간에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고 대립해 있고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라도 양쪽 위원님들이 이것을 차분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장소가 마치 선전·선동의 장 그리고 강요의 장이 되지 않나 저는 좀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님이지만 민주당 위원님들은 혹시 공수처 대행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민주파출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파출소 이름을 붙였는데, 혹시 행정을 총괄하시는데 민주파출소라고 허가를 내주신 적 기억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민주당에서 무작위로 파출소라고 만들었답니다.

제가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출소를 참칭하는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이번 계엄 관련, 탄핵 관련해서 무슨 의견이든지 하여튼 민주당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고소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톡 검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카톡 신고 방법까지 있어서…… 이게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하시고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민주파출소에 유치장도 있습니다. 유치장도 있는데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이미 유치장에 넣으셨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옹호 발언 정치인으로 벌써 유치장에 넣으셨습니다.

교도소도 있어요. 교도소에는 이재명 형수 옥설부터 이재명 조폭 연루설 등등 해서 이렇게 국가기관을 참칭해서 이런 일들을 고소 고발을 하는데, 고소 고발하면 하는 대로 전 국민을 다 피고발인 조사하실 겁니까,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고소 고발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고소 고발을 해도 조사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하시면.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쭙보겠는데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사하실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국수본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수사는 하시고, 그러면 고발하면 불러서 조사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국수본 수사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이런…… 글썄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해야 될 우리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조사하실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 고발이나 이런 거 들어 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고요. 개별 사항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준영 위원** 민주당을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70년 이상 치열하게 싸워 온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인데 국민들을 전부 표현의 자유를 옹아매 공안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당사자도 민주당 당대표세요. 이재명 대표인데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박희승 의원님이 내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죄를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왜 전 국민의 입은 입틀막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민주과출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제보들의 집중 키워드 순위가 나왔는데 내란 선동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뭘지 아십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개딸, 극성 지지층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모조리 다 막으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행님,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보겠는데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행님, 경찰에서 요청받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을 달라고, 사실상 민주당이 주체인 국회소추단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이런 법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법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출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제출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제출본을 보고받지 못해 알 수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 법은 들으니까 아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배준영 위원** 나중에 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차장님, 허위사실이 공공연히 우리 사회에 돌아다니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사회가 혼란스럽……

○**위성곤 위원** 혼란스러워지지요. 그래서 허위사실이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소 고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성곤 위원** 통상적으로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민주주의의 근간은 언론은 풀어 놓고 허위라든가 이런 사실들은 막아냄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와서 체제가 안정되도록 하는 게 경찰 치안 일의 하나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경찰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언론 문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곤 위원** 내란과 관련되어서 허위사실이 공공연히 유포가 되고 있어요.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7일에 권성동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 짝퉁 영장 들고 집행 지휘’. 영장이 짝퉁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영장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재론의 여지 없는 적법한 영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적법한 영장이지요. 이건 분명한 가짜뉴스지요. 아무리 한 당의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적 공세가 필요하다더라도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앞서 영장은 적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확실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영장이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허위사실인 거지요? 이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상현 의원이 1월 3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수처장, 윤 영장 발부 판사 법 위반해서 탄핵해야’. 영장 발부한 판사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부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성곤 위원** 이런 가짜뉴스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혼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사실은 경찰이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아서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제보를 받게 된 겁니다.

앞서 배준영 위원님께서 민주과출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입틀막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허위정보나 허위뉴스를,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행위를 막는 게 당연한 거지요. 입틀막이라고 하면 정당한 나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야지요. 그것을 입틀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들었다면 지금의 탄핵 국면에 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최소한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당에서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내란 선동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계엄은 부정선거 단절을 위한 합법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중, 좌파 빨갱이 세력 척출을 위한 결단이었다. 내란은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런 가짜뉴스를 하고 있고 이것을 카톡방으로 나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위사실로 판명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허위사실 고소 고발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아직 현재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그러한 내용 전체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업무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업무방해에 상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선동에 대해서 경찰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밝혀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관련되어서 경찰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검토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경찰청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위성곤 위원 수사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치안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지금 한남동 상황이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공권력이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동의하기가, 동의하지 않는데 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왜냐하면 한남동 관저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성곤 위원 관저는 지금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거기는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주변을, 제가 집회·시위 관련해서 말씀을……

○위성곤 위원 저는 한남동 관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

○위성곤 위원 무법 상황인 거지요. 범죄자 윤석열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 일당들을 데리고 국가 공권력에 맞서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철저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수본에서 체포영장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치안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치안 불안으로 떨게 만들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호처 안에까지 저희들이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알 수가 없지요. 거기 피의자, 범죄자 윤석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일부의 경호처 직원, 전 직원들이지요. 지금은 윤석열의 사병·사단들이 범죄자를 은닉하고 있고 그리고 도피하고 있다는 혐의를 분명히 둘 수 있지요?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호처 안의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수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다각적으로 놓고 철저하게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추가질문해 주시고요.

○위성곤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정동만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찰청 차장님, 현시점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경찰입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런데 최근 심히 걱정되는 모습이 연일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지난 5일 전국 경찰특공대를 총동원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직장협의회 입장문 발표 잘못된 것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입장문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정동만 위원 경찰 내부 조직부터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그래서 복무규정 준수사항 강조 지시를 했고요,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또 언론을 통한 경찰 관계자발 여론전도 심각합니다, 지금. 체포 베테랑 또 마약수사대 동원, 광역수사단과 체포 작전계획 논의, 강제적 수단 거론하는 등 마치 경찰 힘을 과시하듯이 경찰발 언론 기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경찰 내부가 마치 수사 결과를 정해 놓은 듯 편향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둘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마약수사대, 형기대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은 아마 국수본에서 그걸 외부에 공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국수본 나름대로 충분하게, 국수본부장이 수사에 관해서만큼은 주변의 각 지방청을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러 언론에 공개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한쪽에 편향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편향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동만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도 문제지만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차장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정동만 위원 없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고 내란죄가 있다, 없음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만 위원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면 말씀하십시오, 관련 범죄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수처법에는 내란죄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정동만 위원 현재 수사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밖의 행위이다라고 결정되면 경찰 체포영장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수처 집행은 경찰에 협조를 요할 수 있고요, 그 영장은 판사에 의해서 이미 적법한 결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수사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만 위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단 영장만큼은 법원의 판사로 했기 때문에……

○정동만 위원 법원 판사만 했지 그것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적법한 결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저희……

○정동만 위원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계속 쟁점이 될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재판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영장 발부된 그 자체가 사실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고……

○정동만 위원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지칭하던데 범죄자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현재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재명……

○이광희 위원 현행범이지요.

○정동만 위원 이재명 대표……

○이광희 위원 현행범이지요.

○정동만 위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광희 위원 현행범이지요!

○정동만 위원 왜 방해합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동만 위원 제가 이광희 위원님 이야기할 때 방해했습니까? 좀 가만히 있어요!

○이광희 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건 현행범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동만 위원 확인 좀 합시다!

○이달희 위원 아니, 얘기 다 하고 하세요.

○정동만 위원 이야기 좀 합시다!

○이광희 위원 총 들이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동만 위원 그러면 질문하시든가요!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이광희 위원한테 외쳐 주세요. 방해하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 신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위원장 신정훈**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왜 방해합니까?

○**위원장 신정훈** 자, 위원님들……

○**김종양 위원** 잘 가고 있는 걸 갖다가 거기서 또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정동만 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나왔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라고 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

○**정춘생 위원**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게?

○**정동만 위원** 아니, 좀 가만히 있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입장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동만 위원** 현재 정치적 중립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그것 눈치보고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굴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현재 비상계엄 관련 군과 경찰 수뇌부 다수가 구속돼 있고 지금 수사부터 기소, 재판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도 경찰 수뇌부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아주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전례 없는 상황이나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사법 절차가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강제수사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체포영장은 사실은 강제수사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영장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법하게 영장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차장님, 앞서 지적한 사안의 심각성도 문제지만 당장 감찰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데 민주당 이상식 위원님과 국수본 간에 내통을 자백한 SNS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아까 알고 계신다 했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언뜻 언론을 봤습니다.

○**정동만 위원** 고위 경찰 출신이자 지금 행안위 소속 위원이십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수본과 민주당 사이에서 전화기에 불날 만큼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차장님, 경찰청과 수사에 대해 내통하는 행위는 어떤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경 이상 확인한 바로는 서로 연락한 것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감찰이나 이런 것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중대사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정치경찰이라는 오명과 수사 불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사하실 거지요?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이미 검찰하고 경찰에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철저한, 엄정한 수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엄령에 의한 헌법 유린 사태를, 그 현장을 목도한 증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직무를 집행했던 경찰청장이 불행히도 이 자리에서, 항상 증인석에서 답변했던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보안사령관, 정말 국가의 중요 직무를 담당했던 많은 부하 직원들이 지금 범죄자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대통령은 영장 청구 전이라도 정말 당당하게 나서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향해서도 또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도 더 이상의 이런 헌정 질서 유린 상황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그리고 여기 증인석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의무를 회피할 권리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저까지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이광희 위원** 제가 오후에 잠깐 어디 갔다 와야 돼서 저까지만 좀……

○**위원장 신정훈**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지금……

○**이광희 위원** 저까지만 좀……

○**위원장 신정훈** 순서를 바꿔서라도 오후에 하시지요.

○**이광희 위원** 아니, 오후에 제가…… 지금 12시 정각인데 저까지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았겠습니다만……

○**이광희 위원** 아니,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 먼저 할까요?

○**위원장 신정훈** 그건 나중에 하시지요.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총 들고 국회 난입을 지시한 도주 중인 내란수괴가 무장한 경호대 속에 숨어들어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걸 현행범으로 봐야 되지요? 현행범이셨으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뭐에……

○이광희 위원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출석 불응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출석 불응이 아니라 국회 난입을 지시해서 계엄 상황을, 현재까지의 상황을 지속시킨 내란수괴가 숨어 있는데 그것을 체포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체포영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현행범이지요? 저는 현행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급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같은 국가기관인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경호처가 지금 합법적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방해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더군다나 현재 직무 정지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명령과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봐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구체적인 직무 지시는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신변 안전에 대한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를 경호처에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권한대행이지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지시를 따르고 있지요, 경호처가? 대통령권한대행이 현재 저런 식으로 불법적 영장 집행을 반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그 지시 받으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어떤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경호처 안의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제지를 한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광희 위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력 사용을 지시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잘못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불응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광희 위원 불법 아니지요?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거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경호처가 지금 다 손들고 나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방금 경호처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손들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이광희 위원 아니, 지금 그 지시에 대해서 불응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불법한 직무 지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부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지요.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청 소속의 경찰들과 그리고 국방부 소속 경호부대는 체포영장 집행에 순응했습니다. 아시지요? 길 터 주셨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적법한 집행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광희 위원 적법한 집행이었기 때문에 경찰청 소속과 국방부 소속 경호부대는 체포……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방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우리……

○이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방부가 일부러 터 줬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국방부는 알 수 없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광희 위원 그러면 경호처는 당시에 정당한 사법 판단에 저항하고 현행법 위반을 했지요, 1차 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1차 때, 그래서 국수본에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지금 2차 체포영장을 발급하고 집행을 준비 중입니다.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등 지금처럼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경찰은 경호처에 대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호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계엄 이후에 국회에 8건의 경호법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내용들이 대통령 등의 경호를 하는 경호처를 별도로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경호처가 사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경호처는 1961년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경호대를 통해서 창설이 됐던 사병화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경호처, 경호실장 하면 과거 군사정부의 차지철을 떠올립니다. 차지철이 뭐라고 그랬지요?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는 100만, 200만 희생시키는 것쯤 문제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당시의 통수권자가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었던, 저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경호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이하 3급 이상 간부들을 관저로 불러 격려하는 취지의 오찬 중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저 말과 다를 게 있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뭐 저것하고……

○**이광희 위원**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는 말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시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경호처 필요합니까? 이에 대해서 경호처가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물리력……

○**이광희 위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당연히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물리력 행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수본에서는……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저는 국회에 회부된 법안들, 저 역시 법안을 냈는데 현재의 사병화된 경호처를 따로 두지 말고 경찰 등 별도의 기관을 두고 집행할 것을,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준비가 만약 된다고 하면 경찰의 대통령 경호 업무 가능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이광희 위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일 연방범죄수사청,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임무국, 영국 런던광역경찰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도 경찰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입법적으로만 결정이 되면……

○**이광희 위원** 이번 기회에 경호처의 사설화된 저런 경비 부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없애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고요. 다만 정부 전체의 조직 체계나 역할 분담 또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자료 요청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법령상 특별수사본부의 직무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어서 국가수사본부장의 명령을 근거로 전국 수사관에 대해 동원 지시 공문을 하달한 행위는 직권남용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을 점심시간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명의 인원을 파견 보낸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그동안 국수본부장은 공수처법에 의해서 활동한 것이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댔는데 공수처장은 이게 또 공조본에 파견이 났다 이렇게 했어요. 공조본이라는 것은 이게 임시조직입니다. 파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졸속 파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인한 경찰청 차장과 이에 관계된 사람 모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수처와 주고받은 공문과 협의한 날짜, 1월 3일 영장 집행 시 국수본에서 동원시킨 사복경찰 인원 및 규모, 이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 시 관저 주변에 배치된 교통경찰 배치 상황 및 법적 근거가 뭔지 또 1월 10일 2차 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회의 시 참여한 인원 및 회의 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오후 질의 시작 전까지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모르겠습니다’가 일관이거든요. 오후에는 위원장님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이만희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지요.

○이만희 위원 오늘 제가 지난 21대 때 행안위 같이 했었던 위원님들이 자리에 계시고 또 새롭게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모시고 행안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또 우리 위원회 활동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요구를 잠깐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오전에 제가 경찰청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거의 참고가 안 되는 자료가 왔습니다. 오후에 지금 차장님, 권한대행 와 계시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규정·규칙 제27호 1항을 보면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규정에 의해서 특별수사단을 꾸렸다고 하는데 이 특별수사단 설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또 둘째, 27조 2항에 보면 특별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무관급 경찰관 중에 지명하고 그 지명된 사람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3배수 후보자로 올라가서 심사를 요청해서 거기에 추천된 사람이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지명이 된다 했는데 이 절차를 밟았는지, 지금 우리 국수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단장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근거와 이런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지금 이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전에 조은희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배부된 자료하고 좀 다른니까?

○이달희 위원 비슷한 건데요. 제가 꼭 알고 싶어서……

○위원장 신정훈 추가로 그 내용이 좀 보장돼야 됩니까?

○이달희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에서는 관련한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행안위 첫 모두발언에서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훼손이 돼서, 방지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바로 세우는 데 막중한 임무가 우리 행안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정말 공감합니다. 법치국가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호영 경찰청장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대행님, 아침에 출근할 때 첫 단추 잘못 끼워 보신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우리가 그대로 출근해야 됩니까, 옷 다시 벗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끼워서 제대로 입고 나가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처음부터 다시 끼우면 됩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내란죄가 뭐가 내란죄입니까? 내란은 뭘 내란이라 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헌……

○이달희 위원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내란은 국가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하는 게 내란이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내란죄는 또 다르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헌법에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헌법 기능을 훼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달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하여야 된다고 공수처, 경찰청, 검찰이 나서서 모두 이렇게 이 범죄 사실을 얘기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고

하는데 제일 큰 죄목이 뭐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제가 내란하고 직권남용 이런 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달희 위원**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합니까? 내란죄……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왜냐하면 국수본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이달희 위원** 내란죄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영장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아니, 청장님, 내란죄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공수처가 지금 체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전에 내란죄는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이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에서 하던 것을 경찰로 이관받은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은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달희 위원** 예. 그러면 거기서 국정원에서 하던 걸 중지시키고 검찰에서 하던 걸 중지시켰단 말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중지시켰다기보다는……

○**이달희 위원** 할 수 없게 하고 이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조정하면서 경찰이 하고 2차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란죄 수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법은 경찰은 고유의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경찰과 공수처는……

○**이달희 위원**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건 맞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죄 아니고 형사소추를 할 수 있거나 체포영장을 어떻게 발동할 수 있습니까? 체포영장 가능하겠지요. 형사소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하고 소추는 약간 구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그런데 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데 경찰은 입 다물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라고 해서 공수처와 협의해서 그 체계 안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집행 때 체포영장 갈 때 수사 지휘를 넘겼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 넘긴 게 아니고……

○**이달희 위원** 법에 없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원래……

○**이달희 위원** 법에 없어서 우리가 못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체포영장은 공수처에서 받았고요. 공수처에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공수처 수사 협조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경찰의 오락가락하는, 중심을 안 세우는 이런 수사권이 조정되고 법에 의하면 당연히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기함으로 해서 적법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고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법학자들도 얘기하면 모든 국민이 법을 법대로 ‘좋아. 이참에 대통령이 저렇게 비상계엄령이라는 엄한 일을 하셨으니까 법대로 해 보자’ 법을 차곡차곡 따라오다 보니까 적법절차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적법절차에 맞지 않으니까 저항이 심하고 사회가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겠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시다.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영장 발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경찰청에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대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이렇게 불란스러운데 제대로 법대로 해야지요. 단추 잘못 끼우고 경찰대행 정도 되는 분이 아침에 옷도 빼뜰게 입고 나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잘못 끼웠을 때는 ‘맞습니다. 비상계엄령에 의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그러면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죄라고 해서 현재에 가 있는데 ‘내란죄 빼고 심리해 주십시오’ 양념통닭 시켰는데 통닭은 안 오고 양념만 오면 그게 양념통닭 됩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20대, 30대들이 제대로 법대로 해 보자고 물려 드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는 새로운 세상 적법한 세상 만들고 싶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서울 강동울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첫 단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첫 단추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잘 모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뻔히 알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지요. 만일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었다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있었으면 아마 김용빈 사무총장님께 물어는 봤을 건데요. 그렇지요? 대학 동기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신 뒤에 임명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계엄을 발동을 했고 계엄을 발동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아예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세운 거지요. 계엄이 정당하니까 탄핵도 잘못된 것이다, 사기 탄핵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 자체도 불법이다 그런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단추를 새로 끼우려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 가야 되지요.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호영 직무대행께서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수본이 공조본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국수본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은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대행께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아니, 의지가 없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수본에서 하는 거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식 위원**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인적·물적 차원입니다.

○**이해식 위원** 알겠습니다.

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경찰 경호 대상자로 갑호, 을호, 병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갑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가족 등이고 을호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대통령선거후보자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병호는 을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것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로 분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식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보세요. 야, 오늘 이재명이 모가지 날아간다. 밤 11시에 기대해라’, 내용 잘 아시지요, 대행님께서도? 그리고 최근에 극우 유튜버로 추정이 되는 ‘이도끼’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차량으로 치겠다 이런 테러를 예고하는 제보가 있었고 저기 카톡에 보십니까 마는 ‘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든 사살시키러 가겠습니다’ 이런 살해 협박, 테러 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특히 ‘이미션 헌법재판관 내외 평생 밤길 조심들 하시라’ 이런 협박성 댓글이 넘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찰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경호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경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답변하시기 전에요, 지난 과거 사례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헌법재판관 8명 그리고 2017년도에는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서 각각 4명 그리고 3명씩 근접 경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2014년도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후보자 신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살해 협박,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 PPT 보셨던 녹취록 재생한 것은 1월 2일 날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정치테러를 당한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이런 협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이것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의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순번을 매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체적인 경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택 안전관리하고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리고 각 당의 당대표 관련해서는 선거기간 제외해서 당대표에 대한 경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험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당 측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택의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에도 똑같이 신변보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해식 위원 근접 경호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까지 제가 알기에는 신변보호 요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해식 위원 경호 요청을 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신변보호가 경호 요청인데요.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요.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자택 안전관리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직무대행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경호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러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에 신변보호는 좀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들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해식 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경호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바로잡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요청은 있는데 협의하는 중에…… 그렇지요. 이것 세부 사항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변 경호는. 자택 경비나 행사장은 저희들이 안전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데 어떻든 조금 체계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초유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경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 그냥 개별적인 협의에만 맡겨 둘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혹은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런 정도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여당의 위원님 몇 분이 저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말이 또 불씨가 되고 왜곡이 돼 가지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경찰이나 국수본 경찰관들에게 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다 감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당 위원 몇 분이 경찰과 공수처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차장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가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사법절차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이미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바라고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만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가 호전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서 예약돼 있다’ 이런 말을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나 이런 분들도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호영 차장은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최상목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101, 202 같은 경찰 경호부대를 동원하라는 이런 지시에 소극적으로 응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은 분명히 지켜야 되지만 본인의 가치판단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잘못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호영 직무대행, 차장님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장님, 저는 이번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요, 이것은 제 경험칙상 수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작전의 영역이다, 경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이상식 위원 이게 무슨 어떤 범법자가 도망을 가고 형사들이 몇 명 가서 체포해 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관저를 둘러싸고 철조망, 버스 차벽, 거기다가 무기를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판국에 이것이 통상의 수사로서의 체포라는 개념보다는 경찰 작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차장님 수하에 경비국이 있고 주력 기동부대가 배속돼 있는데 차장님이 분명히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차장님은 조금 미온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국수본이 요청을 하면’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건 국수본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른다’ 이게 통상의 식이고 또 작은 문제 같으면 관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차장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과 같은 엄중한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장님께서 계급으로 봐서는 국수본부장하고 동격에 있고 하지만, 평상시에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호영 차장님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물론 경찰청장이 건재할 때처럼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은 될 수 없지만 본인의 의견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개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까 말씀드린 체포영장은 사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경찰법에도 명확하게 구체적 사건 지휘는 배제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그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가 있고요.

○이상식 위원 경찰은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법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집행 시도에 나서면 지휘 체계에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장은 공수처하고 국수본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수본부장하고 차장님 간의 역할 한계도 분명하게 돼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대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체포영장은 사실 공수처가 신청해서 발부받은 영장입니다. 국수본부도 사실은 수사 협조를 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능에서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 저번 공수처의 1차 집행 시도가 실패한 것은 공수처에서 부장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찰은 경무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의 경무관 1명이 파견 와서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서는 더 상급자가 현장에 입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국수본부장하고 한번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국수본부장님이나 안보수사국장, 치안감이 현장에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차장님께서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요.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벌써 경호처에서 지금 강경파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엄정 대처한다’, 무기 사용 또 ‘칼을 사용해서라도’라는 이런 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경호처 쪽에서 그런 물리력을 사용한다 하면 우리가 맨몸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까지 감안해서 국수본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또 차장님은 국수본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왜냐하면 제가 수사 집행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식 위원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차장님.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공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공대? 특공대가 경찰의 가장 강한 물리력인데 이게 전면으로 나선다 이것은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원거리에 배치해서 위력 과시를 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대비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수본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어이없는 계엄 선포가 되고 4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정부도 마찬가지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을 두고 법률의 충돌은 이제 사실상 물리적 공권력의 충돌이 우려되고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 혼란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화를 풀어 주고 어루만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물대포를 쏘아서 체포하라’, ‘내 가슴에 총을 찌라는 결기를 갖고 체포영장에 임하라’라고 국민을 자극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게는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논리를 갖고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탄핵, 내란죄 수사로 인해 대행의 대행체제하에서 민생과 경제, 필수적인 행정기능만을 감당하기에도 어려워 행정시스템에 의한 조정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가지고서 현재의 상황을 현재에 존재하는 헌법과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국가권력의 실행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권한의 배분은 관례와 현상 유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이것은 어떤 현상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면 어떤 형태든 다 걸릴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장의 신청과 발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행안위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장직무대행의 입장에서는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그 발부한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체포영장이라는 부분은 먼저 우리나라 수사의 원칙은 지금 국수본부장 안 계시니까 대행님,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 게 뭘니까? 체포영장의 효력이 뭘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출석 불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조승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피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체포 시에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가지고서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맞습니다.

신체 구속은 판사가 하도록 하는……

○조승환 위원 48시간 구금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지금 48시간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입니다, 직무는 정지되어

있으나 현직 대통령을 48시간 구금하기 위해 가지고서,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 메신저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마는 이걸 경비 부대의 작전으로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왕조 시대에 반란을 저질러 가지고서 반란에 대해서 토벌군이 들어와서 수괴를, 반란 우두머리를 참수라도 할 듯이 영장 집행을 하겠다.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우리 지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요건은 또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48시간 구금해서 대통령이 수사 비협조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에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구속 기소도 할 수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전구속영장 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권력끼리의 충돌은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우리가 체포영장보다 훨씬 더 중한 구속영장까지 포함해서 보면 사실 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많습니다, 정당에 의해서도 영장 집행이 안 됐고 노동단체에 의해서도 영장 집행이 안 됐고.

이런 다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실과의 무력 충돌 위험성, 국민들의 찬성·반대 시위대 간의 충돌성, 심지어는 오늘 백골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체포조, 사설 방호조와의 충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대통령을 48시간 구금하겠다는 이 목적만, 48시간 동안 구금하겠다는 이 목적만 가지고서 이러한 위험성을 다 지는 영장 집행, 법률적으로 해서 정말 비교형량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전체적으로 의견 내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다만 체포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경찰은 집행할 뿐입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공권력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아까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면 국회의원들 연행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이 현장에, 아까 죽 박정현 위원님 이름 부를 때 제 이름은 빠져 있어가지고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는데 우리가 영장 집행 현장에 참여하는 목적은 우리 국민들 간의 충돌을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국회의원의 역할 또 경호실과 경찰 경력 간의 충돌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양태가 나오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회의원이 영장 집행할 때가 있으면 연행하겠다고, 말이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영장 집행을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전북 익산을 한병도 위원입니다.

먼저 항공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179분의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소방청장님, 항공사고는 대규모 피해 유발하기에 공항 소방대의 초동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런데 현재 공항 소방대는 민간 조직으로 분류되어서 소방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공항 소방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라서 설치·운영되지만 업무 내용과 중요도는 소방공무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방청의 감독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교육훈련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인천공항 소방대는 지난해 소방청 주관 교육훈련을 26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소방대는 단 한 차례에 그쳤거든요. 이런 것들도 소방청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교육훈련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핵심 요소이고요. 소방청이 자율 참여라는 명목으로 뒷짐 지고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항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현재에는 소방기본법과 시행규칙에서 자체 소방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체계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함께 포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한병도 위원** 그리고 지금 제 걱정이 탄핵 관련된 40여 일이 지나갔는데 핵심은,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가지로 뻗어서 법적 문제, 누가 옳네 그르네, 여야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똥 뽀뽀이 성 낸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표현되는구나.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쳐 놓고 그리고 지금도 싸우라고 하고 저항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은 첨예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부정선거 이야기 이것은 결과를 승복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상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차장님,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 현장에 계시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어떻게 느끼는 것 그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뭐에 대해서……

○**한병도 위원** 나타나는 최근의 현상, 탄핵 이후의 일련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병도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이걸 또 선관위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 비슷하게 선관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병도 위원** 제 걱정은 다른 게 아니고 사회가 양극단으로 가는, 끝을 모르는 충돌 양상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상식과 논의,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대립하고 그냥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이 건 지금 법과 상식이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큰 문제가 내란 이후에 사회가 더 갈등 되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현상이지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방송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방송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데 거꾸로 부정선거가 있었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러면 앞으로 선거 결과가 지면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 분위기로 가면요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폭력도 유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극단이면. 그런데 우리가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법과 상식이 최소한의 사회 운영을 위한 완충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보고 느끼면서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이 있는 분들이 아, 이게 아예 부정선거라는 게 원천적으로 투표 개표 용지를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정보를 듣는 게 극단적인 이런 쪽을 통해서만 정보를 듣다 보니까 가장 상식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으니깐 이걸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했다고 별 아무리 유튜브에서 거짓말을 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가 더 걱정입니다. 이런 양극단의 인정하지 않는 게 갈 것 같아 가지고 선관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도개선이나 법적 문제 고민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 나름대로 22대 국선을 관리하면서 제도도 좀 개선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정선거론이 다시 활발해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은 선거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등으로 인해서 선거 제도 자체를 공격을 받으면 민주주의에 크나큰 위기가 도래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지금 말씀한 대로 이런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의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국가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를 의무가 있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옹혜인 위원** 그리고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국가공무원이 따르지 않거나 혹은 가로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없습니다.

○**옹혜인 위원** 없지요?

경찰청 차장님 들으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들었습니다.

○**옹혜인 위원** 헌법과 법률을 어기라는 이곳 행안위에 있는 위원들의 불법 선동에 경찰이 휘둘리면 안 되고 법률에 따라서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호영 직무대리께 좀 더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경찰 조직에서 직무 배제된 간부 누구누구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에서 말입니까?

○**옹혜인 위원** 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는 서울경찰청장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2명이 배제됐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렇게 2명밖에 없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옹혜인 위원** 내란에 동조했었던 그리고 그때 그 작전을 수행했었던 경찰청 간부 그리고 서울청 간부들 다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최소한 군은 문제 제기된 간부들을 직위해제라도 했거든요. 저는 물론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사령관급, 그러니까 수뇌부들만 직무 배제가 된 건데 그래도 시늉이라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차장께서 경찰이 잘못을 만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고 한 달이 지났는데 최소한으로 책임을 묻고 쇄신하는 이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무대리가 되신 이후에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내란에 동조하고 여러 업무들을 수행했던 동조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내사를 했다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현재는 없고요.

○**옹혜인 위원** 없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옹혜인 위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직무대리님께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이 남아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국민들이 경찰을 다시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지호·김봉식, 2명 청장이 이곳 국회에 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 구속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거짓말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이곳 행안위 전체회의에 와서 김봉식·조지호 두 사람이 거짓말했을 때 함께 배석하고 있었던 경찰청 간부들, 이 내란수괴의 지시를 따랐던 주요 간부들이 그 두 사람이 이곳 행안위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인 줄 몰랐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옹혜인 위원** 모르지 않았습시다. 최소한 군에서는 양심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 조직 다 해서 그 누구도 양심 고백한 사람이 없습시다.

다 해서 조지호·김봉식, 두 사람만 내란에 가담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차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은 않고 있고요. 지금 수사가 약간 참고인 조사 위주로 거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곧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군에서는 형사적 절차가 마무리돼서 직무 해제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이제……

○**옹혜인 위원** 그렇지 않습시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3일 서울경찰청 출입 내역이에요.

경비부장, 정보부장, 수사부장, 공공안전차장까지 우연히도 계엄 선포 전에 서울청에 퇴근 이후에 복귀를 합니다. 이호영 차장님께서 12월 3일 밤에 몇 시에 청사에 도착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11시 한 30분 좀 넘어서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그렇지요. TV로 보고 알았다면 그 정도 시간에 딱 도착했을 만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엄 선포 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청사에 모였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래서 이 사람들도 수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아직 인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옹혜인 위원** 왜 인사를 하지 않고 계시냐고 여쭙보는 거예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옹혜인 위원** 김봉식 전 청장이 윤석열 내란수괴랑 안가 회동한 직후에 지시사항 하달 받고 서울청에 복귀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청에 복귀를 해요. 사실상 계엄에 필요한 계통들을 모조리 소집했다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곳 행안위 12월 13일 회의에서 주진우 경비부장이 7시 40분에 경찰청장 전화 받고 청에 복귀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귀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행안위 때도 다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회를 틀어막고 정치인들 체포하는 데 필요한 주요 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계엄 선포되기 전까지 청사에 다 모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국회를 틀어막고 방첩사랑 같이 정치인 체포하는 걸 준비하고 실행한 겁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어도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명령에 따랐으면 잘못이 아닌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명령에 따랐어도 잘못입니다.

○**옹혜인 위원** 잘못된 명령에 따랐으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리고 조만간에 확인하고 수사가 되는 걸 보면서 바로 인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수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직무 해제라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경비부장, 비상계엄 시에 통제해야 하는 국회 출입문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까지 김봉식 청장한테 속속들이 다 보고한 사람입니다, 계엄 전에. 이게 다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임경우 수사부장, 방첩사 요청에 따라서 체포조 100인 명단 작성한 사람입니다.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하더라도 그런 명령에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서울청장직무대리로 앉아 있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은 국회 출입 통제를 말리는커녕 문제없다라고 법률 검토까지 해 줬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검찰 수사도 받고 왔어요. 이런 사실들 차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검찰 조사 받은 건 알고 있고요. 그 사실관계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옹호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옹혜인 위원** 내 식구 감싸기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정확한.....

○**옹혜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받았나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두시면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전반적으로 조만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가 조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옹혜인 위원** 백번 양보해서 징계 절차라고 하는 건 특수본 수사 결과 지켜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직무 배제는 당장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야 경찰이 자신 있게 내란 동조 세력들과 과감하게 선 긋고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국수본 수사를 믿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서울청장직무대리가 주요 종사자였고 주요 종사자의 직무대리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경찰에서 아직 다 배제되지 않았다고요.

최소한 주진우 경비부장, 임경우 수사부장,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은 반드시 직무 배제시켜야 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공무원법 7조에 따르면 총경의 직위해제는 경찰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직무대리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당장 직위해제 검토해 주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분들이 총경은 아니고요. 경무관 이상입니다.

○옹혜인 위원 민주경찰의 책임자답게 행동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빠른 기간 내에 직무 해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마지막으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도대체 경찰이 무얼 했는지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출근한 사람들 서울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다 모이거든요, 출입 기록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했는지, 누구누구 모였는지, 광수단의 청사 출입 내역 어떻게 되는지, 영등포서 출동 세부 현황 이런 것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철저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옹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리님, 수사 중인 것이야 그 결과를 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지금 이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의 공소장에 기록돼 있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주요한 그 직무에 있어서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경찰행정의 주요한 국민들의 안전과 또 치안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직무상의 어떤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현안 질의가 계속 중이지만요.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시에 국민의힘 의총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소방청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윤건영 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성남 화재 대응과 관련해서 우선 잘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십 명이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와 설비 문제도 있었지만 소방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현명한



선택 등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은 되게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소방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 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계엄 발표가 있을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윤건영 위원 몇 시에 개최하셨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마는……

○윤건영 위원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이 발표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이 다른 어느 부서보다 빨리 국·과장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직접 주재하셨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 위원 국·과장 대책회의에서 당시 행안부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전화를, 제가 그 회의 중에 전화를 한 번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 전화의 내용이 혹여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윤건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청장님, 한 달 갓 지난 건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것만큼 주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일인가요?

제가 다시 여쭙어볼게요, 청장님.

이상민 장관이 청장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하셨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윤건영 위원 아니요, 제가 분명하게 다시 여쭙게요.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따라서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법기관에 넘어가면 신분상에 여러 제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과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이상민 전 장관의 내용에는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것은 아니고요.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 줘라 이렇게……

○윤건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그거지요.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제가 추가로 또 여쭙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런 지시를 제삼자에게 이관한 적이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소방청장 허석곤 그날 회의 석상이었기 때문에 옆에 차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차장하고 같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요, 차장이 아니라……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청장께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한테 이 지시 내용을 이첩하신 적 있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시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청장께서는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요구를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입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이 그 내용을 다른 제삼자에게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 회의에서 또는 직원들에게?

○소방청장 허석곤 지시하지 않았습시다.

○윤건영 위원 지시하지 않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좀 전에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옆자리에 차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장관님이 전화 오신 내용을……

○윤건영 위원 이상민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차장에게 했다는 거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단전·단수 지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경찰청에……

○윤건영 위원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러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건영 위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신문 들어갑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아마……

○윤건영 위원 답을 하세요. 들어가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기억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윤건영 위원 안 들어가지요.

MBC 들어가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 자,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한겨레·경향·MBC,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했고 그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이 차장에게 상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청장께서 이상민 장관의 주요 언론사, 한겨레·경향·MBC의 단전·단수 조치…… 지금 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하부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경찰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 또는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청장께서는 장관의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상당히 급박한 상태입니다마는 단전·단수가 소방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예.

○소방청장 허석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장관님도 명확하게 저한테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윤건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 허석곤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게 지시지요. 협조하라는 게 지시지, 그러면…… 공직 생활 지금 하루이틀 하십니까, 청장님.

전화 온 게 정확하게 몇 시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 국·과장 대책회의가 10시 35분 그 언저리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상민 장관 전화 온 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전화받은 시간이 그때 자료를 보니까 10시 37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위원 10시 37분, 그런 중차대한 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국회에 보고조차 안 하셨습니까, 청장님? 오늘에서까지, 한 달이 지나서까지 소방청은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그냥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청장이 뭇겐 겁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 전화가 왔느냐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았다고 저희들 국회에 답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윤건영 위원 그 전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 한겨

레·경향·MBC 등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는 계엄군 또는 계엄군 산하에 있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소방청이 적극 협조하라 이게 불법인 겁니다, 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누구에게도 그것을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아니, 청장님만 아셨든지 그것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내란에 대한 불법·부당한 지시를 받았더라는 그 내용들을 국회에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최소한.

추가질의로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참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왕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하십시오. 그때 있었던 상황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구체적으로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뉘앙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청장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앞에 말씀을 소상히 보고하시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우리가 한 10시 20분부터 소방청에서 간부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대체 어떤 조치를 갖다…… 저희들도 계엄 선포되고 나서 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에서나 이런 데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고 그런 단계에서……

○위원장 신정훈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래서 그 자리에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관님께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씀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 어떤 행위를 협조하라고 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글썄요,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단전·단수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청에서 명확하게 단전·단수를 저희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지금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청장하고 협의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

○소방청장 허석곤 그 전화를 받고 옆에 바로 차장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장관님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런 말씀, 언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 줘라. 그리고 그 내용이 단전·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런 걸, 과연 단전이나 단수가 소방 업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

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추후에 윤건영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이호영 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하고,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공수처와 협동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차 집행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 집행의 주체는 누구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수처입니다.

○이만희 **위원** 공수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수본, 경찰에서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는 뭐 언론에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은 일관되게 공수처의 체포영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1차에서 집행했던 것처럼, 집행을 시도했던 것처럼 그러면 57명의 수사관을 파견 형식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이번 2차는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2차는 아직 국수본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직무대행께서 보고를 받거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1차 때는 인력 파견 요청은 받았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집행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언론 보도나 이런 것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전체 광역수사대라든지 1000명이 넘는 형사를 동원한다 또 마약수사대까지 동원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거는 보고받지 못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인력을 수도권에서 모아서 인력을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공수처에 지원하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부장은 시·도경찰청의 수사 기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라면서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수처가 하는 것을 수사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원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보낸다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말은 1차와 마찬가지로 파견 형식으로 하겠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는 파견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 협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행께서는 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경찰청장은 원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 사건에 관해서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수본부장한테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경찰에 관한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대행에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집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한, 발부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원되는 공수처, 경찰 그리고 지금 경호처 간에 심각한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경찰 수사에 대한 많은 국민적 관심과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려를 생각했을 때는 수사에서의 무결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수사의 공정성 또 철저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수사기관의 어떤 영장 집행에만 몰입한 어떤 그런 판단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국가기관 간의 갈등 또는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업무 집행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무려 29번에 걸친 줄 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12월 3일 내란과 관련해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을 또 빼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체포영장의 발부와 관련해 가지고도 수사기관과 발부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도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카톡까지도 검열하겠다는 거지요.

경찰청장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이만희 위원** SNS 등 각종 그런 대화 소통의 수단에 대해서 검열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마 우리가 많은 경험적으로 보면 중국입니다, 중국. 거기에서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검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가짜뉴스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얘기들을 했다 하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팍팍 뚫린다고 주장한 사람들

이 누구, 어느 정치세력이었습니까? 사드 배치되면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것은 어느 정치세력들이 주장한 내용들입니까?

저는 결코 우리가 국민의 소통이나 의사, 정당의 내용들이 소통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선관위 총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아까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한병도 위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분의 의견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해결책 부분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나 하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해라 이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덜어내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그런 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적어도 수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 의구심을 풀어 주기 위한 부분에 총장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조금 전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님, 언론사 중에서 아까 3개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생각나시는 것.

○소방청장 허석곤 기억이 오래된, 조금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3개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채현일 위원 김어준 뉴스공장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 외에도 다른 시설, 공공기관이나 국회, 선관위 등 그런 거에 대한 조치, 단전·단수 이런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소방청장 허석곤 기억이 없습니다.

○채현일 위원 언론사만 얘기한 건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언론사 몇 곳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아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외에 또 뭐가 있나요?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물어볼 때만 말씀하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 그러니까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채현일 위원 MBC하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MBC하고 뉴스공장……

○채현일 위원 JTBC는요?

○소방청장 허석곤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마는……

○채현일 위원 그리고 행안부 직무대행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처음 듣고.

그러면 경찰청 직무대행님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민심을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태균 수범을 베낀 여론조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1월 5일 자 윤석열 지지율이 40%라는 괴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란 전보다 지지율이 높아진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편향된 설문으로 조작됐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설문지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봤습니다.

○채현일 위원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일단 전제조건이 저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만 규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이번에 문제된 설문조사 그 문항처럼 정치 여론조사와 선거 여론조사가 혼합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채현일 위원 지난번에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여론조사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취지에서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3번 문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답변의 40%에 대한 지지가 나왔고요.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44%라는 찬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리를 마치 논란과 의혹이 있는 것처럼 편향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황당한 소리로 참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화를 끊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특정 성향의 여론이 과표집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식으로 저희 중앙선거여심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108조 위반 여부는 형사사건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 8항, 그러니까 9항·10항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현일 위원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4월 달에 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예비후보들이 이미 선거운동을 뛰고 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지지율과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민주주의 수호 기관이고 여론 조작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약간 여론조작에 너무 관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명태균 같은 경우도 2016년 총선에서 여론조작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에서도 그런 짓을 했고요. 이번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도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작을 했습니다. 그때 경고 조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엄하게, 엄중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창원지검 검찰 수사보고서 읽어 보셨나요? 명태균-윤석열·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니다.

○채현일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릅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선거캠프 구성, 언론 대응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명태균에게 조언받고 명태균이 가르쳐 준 대로 이행했다는 겁니다. 이것 어처구니없는 거지요. 그것 방송에서 봤으니까, 이미 언론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특히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전달했는데 그중에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포함되고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니다.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사실관계를 더 조사……

○채현일 위원 이게 사실관계가 맞다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카톡에 보면 김건희가 홍준표가 이길까 걱정하니까 명태균이 자체 여론조사 실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불법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현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 국민의힘 57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책임당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제공했었습니다. 이것 유출한 것도 불법이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검찰 보고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봤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쭙보시는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명태균의 여론조작, 그로 인한 자신의 경선 승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가 나온 날짜가 11월 5일이었고요, 11월 15일에 명태균이 구속됩니다. 11월 24일에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구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월 2일 날 명태균이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12월 3일 날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고 그날 저녁에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윤석열 본인이 대선 때 여론조작 등 선거 부정을 해 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 여론조사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폐해가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 원인 및 제도개선 대책을 저희들이 나름 수행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서 불법 선거 여론조사에 의한 폐해를 가능하면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에서나 오후 질의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부정,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번 대통령의 계엄이 사실은 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가장 드러났던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3일 날 계엄을 하고 12월 12일 날 담화문 발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충격에 빠졌다, 선관위가 그 정도로 허술함이 많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계엄의 요인 중의 하나가 국정원과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질문을 하겠는데요.

일단 PPT 자료 하나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행안부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저게 처음에 KISA하고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첫 발단이 됐던 게 행안부가 작년 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동 보안점검 설명회 제안을 합니다. 차관님,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행안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런 보안점검을 제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없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2023년에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공문에 나와 있듯이 2022년부터 여러 가지 해킹에 대한 관련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차원에서 컨설팅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권 위원 이걸 그때 컨설팅을 할 때 국정원하고 같이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제안을 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사이버 보안은 국정원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에 대해서 국정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순수하게 행안부에서 먼저 한 것 맞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국정원하고 함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안점검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선관위하고 한 것은 맞는데 제안을 한 게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을 한 건가, 국정원하고 무관하게, 아니면 국정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첫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그 선후 관계는 조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정원과 함께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이성권 위원 국정원과 함께 제안을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서로 교감이 사전에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먼저 국정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행안부가 문서에 나온 것처럼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안점검을 제안했는데 다른 헌법기관 중에서 수용한 곳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감사원만 의견을 뒀습니다.

○이성권 위원 감사원이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선위는 그때 당시에는 거부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권 위원** 왜 희망하지 않았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아마 헌법기관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성권 위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감사원의 경우에도 희망을 했고 전체 시스템보다는 주로 홈페이지 중심으로 보안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단 거부를 했다고 보시는 거고.

중선위 사무총장님, 어때요? 실제 보안점검을 거부한 이유가 뭘니까, 그때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이 행안부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전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아마 주체가 국정원에서 정보 보안을 관리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헌법기관을 포함해서 행정기관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기관으로서는 단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부분하고 께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대해서 헌법기관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구조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감사원은 행정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일단 지금 답변 내용은 국정원이 주도해서 통합적인 관리 하는 과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러니까 만약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회가 여기 들어간다고 했었으면 저희들은 받았을 겁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다음 PPT 보면 이게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났을 때입니다, 거부하고 난 다음에, 안 받았다고. 그렇지요? 그리고 5월 23일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 자료를 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그때가 한창 채용 비리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가 중선관위가 국가정보원하고 또 KISA하고 같이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받겠다, 수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전환이 되었거든요. 방금 그 논리로 따져 보면 입장이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저게 임의적으로 보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갔고 보안감사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성권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장난이지요. 그러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보안점검 혹은 감사가 아니고 컨설팅이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고 국정원은 지금도 보안점검·감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각각이 달라요. 제가 국정원의 문서를 다 받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배경이 뭐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것 지금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국정원의 권한 범위에서 보안감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 시비와 함께 기관의 비리가 있어서 과연 이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보안감사는 받지 않지만 국민들한테 보여 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하에 저희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보안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그 감사를 받아 보겠다, 보안 컨설팅을 받아 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1분이요?

○**이성권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렇게 하시지요.

○**이성권 위원** 그래서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보안감사·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국정원 보도 자료 따로 내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또 따로 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성권 위원** 제가 지금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양쪽의 주장이 제일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이 모의 해킹 시험이었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부여한다든지 문을 다 열어 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나오는 PPT에 나오는 자료와 같이 저렇게 다 허술한 점이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중선관위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방식과 함께 기존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하에서도 모의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병행했는데 두 가지 다 뚫렸다는 거예요. 2개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과정에서 또 최근에 저희 중앙선관위가 국정원 감사에, 그러니까 보안 컨설팅 때 비협조했다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들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심어 놔던 소위 점검 도구를 동의 없이 삭제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 부분을, 소위 악성 해킹 코드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인가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그 자체로 걸러지게 돼 있는데, 방화벽상.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점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풀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그게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방화벽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국정원이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정원하고 입장이 180도 다른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국정원의 이걸 담당했던 직원하고 또 선관위의 이걸 담당했던 직원을 따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다 마쳤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지난 12월 29일 항공기 참사 현장에서 대단히 많이, 행안부뿐만이 아니고 경찰청 또 국과수, 행안부 소관의 공직자들이 많이 투입돼 가지고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이번 항공기 참사 과정에서 행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 이후에도 유가족의 남은 과제들, 요청 사항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우선적으로 초기 여러 가지 수습은 마무리됐습니다만 향후의 유가족 지원 문제가 있고 또 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는 부분 또 항공 운항을 혁신하는 부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담할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 부분,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지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사고 관련해서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님, 윤건영 간사님, 행안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메꾸어 주시고 또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도, 참 불행한 일이고 다시는 재연돼서는 안 될 불행한 참사이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들과 경찰청, 국과수 또 소방청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그야말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요. 이미 발생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로서의 후속 지원사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대책 이 부분을 간략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희가 이번에 대응을 하며, 대처를 하면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만 그 운영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도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분야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안에 있습니다만 사회재난이 특수성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재난 관련된 법을 좀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사회재난에 대한 사례, 유형 그리고 또 복구 지원체계가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완돼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이라든가 포항지진 특별법이라든가 또 강원도 산불 화재, 여러 가지 관련한 이 사항에서 보면 지원 기준들이 정확히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공기 사고에 따르는 국가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구제 또 향후에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추모 공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이번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따른 복구 지원체계가 좀 더 정형화되어야 되겠다, 제도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 구제 그리고 이 피해가 광주·전남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역 경제와 지역 이미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 그리고 그 사고에 투입됐던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의 수습반으로서 나가 있던 일부 현장의 경찰관들은 아직까지 그 현장에 대한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행안부 차원에서 지금 정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지원의 줄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원칙적인 말씀만 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말씀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선 ‘복구’라고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구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은 관계 부처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재난 관련, 특히 특별재난지역 관련된 사항들은 보장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서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자는 광주·전남인데 현재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데는 무안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이 이후에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양 시도가 협력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행안부가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고 또 누락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재난구역은 무안으로 선포됐습니다만 사회재난의 특성상 희생자가 계신 주민등록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한 여러 사항들 잘 유념해서 제도적인 사항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아울러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통한 또 사후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항공기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 그리고 장례 절차가 빨라질 수 있기까지는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청과 또 경찰청의 과학수사대입니다, 그 인력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고. 또 하나는 유전자 분석을 거의 1000건 이상, 1700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전자 분석을 일주일 내 다 마치고 또 시신을 완전히 원상태로 수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국가수사본부, 이 현장을 지휘했던 분들이 계시지요.

수사심의관 나와 계신가요, 과학수사심의관?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현장에 투입됐었지요?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예.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 나오시지요.

사고 12시간 만에 179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68시간 만에 179명 전원 신원을 확인하고 8일 만에, 그러니까 전체 시신의 형태가 거의 다 조각나 있는 상태가 1000개가 넘었지요, 1000편? ‘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그렇습니다. 1014편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이 과정에 있어서 간단히 진행 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가 179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항공사고 중에서 제일 큰 희생자가 발생하였던 사고입니다. 항공기가 충격으로 동체가 손상되고 폭발 및 화재로 시신이 넓은 범위로 비산하여 현장에서 1000여 편이 넘는 조각 시신이 수습되는 등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고 발생 직후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온전하게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긴밀히 협조했고 이후 신원 확인부터 시신 인도는 국과수와 협업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시신 검안 등 시신 확인 과정에서 국과수와 경찰의 신속한 지문 감정과 DNA 교차 감정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최대한 온전한 시신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셨고 특히 국과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무리까지 조치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아마 한국형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체계라고 하는 KDVI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던 것이 이번 사고 처리 과정에서 대단히 신속한 수습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또 보고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12·29 여객기 참사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고가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1832명의 과학수사관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아울러서 현장에 투입됐던 공직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치료, 심리적인 어떤 상처에 대해서 조속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소방청 또 경찰청 그리고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질문을 마치겠고요.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행안부장관직무대행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는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행안부가 잘못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기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관저 관련해서 갑자기 질문하셔서, 하여튼 굉장히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모경종 위원 계약서를 못 썼고 준공검사를 못 나갔고 이런 점들이 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저는 지금 국무회의록이 없는 것도 행안부의 잘못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가 했어야 할 역할을 못 했고 또는 못 할 상황이었을 때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고 이 지점 행안부가 잘못된 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국무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경종 위원 이용철 국가기록원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입니다.

○모경종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가기록원장님, 공수처가 지난달에 계엄 관련 기록물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록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정확하게 폐기 금지 요청입니다.

○모경종 위원 폐기 금지 요청을 해 왔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그래서 금주 중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고시하고 공문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합니다.

○모경종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12월 10일 날 조치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현장 점검도 한 번 나가셨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그것은 별건입니다.

○모경종 위원 현장 점검을 나가서 하신 내용은 뭐지요, 그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계엄 관련해서 공수처가 요청한 기관도 해당은 되지만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 기록물법상에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때 현장 점검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었나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생산 기록물의 등록 여부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등록된 기록물의 목록을 저희가 점검반원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모경종 위원 방금 관보에다가 알린다고 하셨는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위해서 이렇게 알리는 정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일단 먼저 해당 기관에 공문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필요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기록원장님, 지금 방첩사 등 여러 군데에서 친위 쿠데타 관련된 문서를

폐기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제가 그냥 보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들었습니다.

○**모경종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모경종 위원** 그리고 국가기록원장님은 단순히 언론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랩하고 아카이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국가가 운영되면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고 이것을 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곳이 국가기록원 아닙니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집행은 해당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법 제도를 관장하는 것이 저희 책무가 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모경종 위원** 이번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자료들이 유실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잘 집행되게 만들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국가기록원장님으로서 역할을 잘못하면 방기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났다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방안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국가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히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록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도 국가기록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나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그래서 관련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더 그런 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회의록을 안 남긴, 방금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서 ‘국무회의록이 안 남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저희 법령에도 관련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신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저희 법이 아니라……

○**모경종 위원** 대통령기록……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기록물, 그러니까 국무회의 규정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돼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회의록 등 국가기록물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그 부분은 아직 법에……

○**모경종 위원** 법이 없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모경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이 범죄자들이 애초에 기록물을 안 남기고 또는 기록물을 폐기시켜 버리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고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

로 긍정적 입장을 같이 내주시겠습니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관계 기관 의견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행안부장관직무대행께 이야기한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나라가 이런 계약서, 준공검사, 기록물 모든 것이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더 아주 아주 허술하게 진행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왜 이렇게 운영돼야 됩니까? 행안부장관 안 계신다고 지금 다들 느슨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직무대행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행정·안전, 행정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직무대행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유념하겠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법원과 공수처, 경찰이 인정했듯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행정응원 차원을 넘어서는 경찰의 활동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영장 집행은 수사 활동이므로 공수처 수사관 또는 수사 요원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제17조 5항에 의하면 동원된 경찰관은 규칙상 수색, 유관기관 협조, 현장 목검문 등의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조은희 위원** 경찰청장 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조은희 위원**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지금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간첩 잡는 안보수사대 등을 전국적으로 소집 명령을 내리고 투입 지시 내렸지요?

‘예스, 노’ 하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소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 57명을 파견하는 사인을 대행님이 하셨는데 지금 1000여명의 경찰 인력도 모두 공수처로 파견하는 형식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아직 국수본에서 요청받지 못했습니다.

○**조은희 위원** 요청받으면 지난번처럼 또 하시겠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필요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 단기 파견 직원들의 의사 묻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되잖아요. 의사 확인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국수본에서 명단을 쫓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런데 사인은 대행님이 하셨는데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57명 전부에 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면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대행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인사권자가 파견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파견할 때 지금 공수처에서 일시 파견 형태로 가는 거면 그 형사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도청 소속의 인원을 본인 의사 관계없이 파견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에서 수사지휘관도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조은희 위원 국수본부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소속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대행님은 그냥 대서방처럼 사인만 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역 어느 청에서는 반발이 심하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미 변호인 측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사전구속, 이 체포보다는…… 밀어붙이기보다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기소하는 등 대안 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을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행님은 모두 부적절하다고 그러고 지금 피하기만 하시는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에 관련한 질문은……

○조은희 위원 이렇게 특정 사건에 마수대, 안보수사대, 형기대, 전문부서까지 동시에 대규모 동원되면 일선 치안 공백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대행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것에서는 치안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4일 단기 파견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경찰이 주도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1000여 명 전부 대기명령 받아 놓고 마약수사대, 조폭 잡는 형사들을 다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 체포하는데 구속영장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경우에,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다음 질의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전 오후에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

민의힘 지지율은 41.6%, 민주당 지지율은 31.5%, 10포인트가량 앞질렀어요.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 여심위로부터 규정 위반이 있다는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

○조은희 위원 화면 다시 봐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새해로 접어들면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5개 여론조사 모두 정당 지지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최근 갤럽과 MBS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인데요. 이들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심의위로부터 규정 위반이 있다는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정당 지지도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했다는 조사만 특정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다가 고발 못하니까 지금 여심위에 접수했다는데 아까 접수받았다 그러셨지요, 이의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하실 때요 다 비슷한데 한 곳만 이의신청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업체를 고발한다, 고발할 근거가 없으니까 이의신청 한다 이렇게 하는 아전인수격 민주당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108조 9항인가요? 그렇게 이의가 있는 경우에 여심위에 이의신청 하도록 돼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여론조사 값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전화면접조사나 ARS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어떤 것을 신뢰하느냐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언급하신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여론조사 결과값이 전부 비슷합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소방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이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계엄 선포가 10시 22분에 있었는데 10시 37분에 전화받으셨다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아니요, 11시 37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11시 37분이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까 전에 10시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언제쯤 가신 거지요, 소방청으로 들어오신 게?

○소방청장 허석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소방청에 입실한 게 아마 11시 조금..... 0 몇 분에 입실한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계엄 하는 것 보고 부리나케 뛰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비서실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사무실로 나왔습니다.

○김성희 위원 단전·단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관련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셨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진술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진술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상민 장관이 적극적으로 계엄을 엄호하면서 언론의 자유까지 탄압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소방청은 사실 정치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여야 할 것 없이 소방청 잘돼라고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법도 개정하고 어떻게든 소방청 활동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소방청은 편파적으로 하시지요?

계엄에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윤건영 위원께서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지금?

○소방청장 허석곤 그것이.....

○김성희 위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날 전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자료에 제가 행안부장관님 하고 통화가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출을 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내용이 중요하지 통화를 했다는 것을 제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방 활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성희 위원 단전·단수를 빼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단전·단수를 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렇습니다마는 경찰.....

○김성희 위원 이상민 장관이 내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 부분만 짚 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로 지금 임하시는 건데 이것 내란 수사가 만만치 않은 수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동 통화녹음 보통 다 쓰는데 하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저는 쓰지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수사기관에 가셔도 그렇게 진술하실 거지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안 쓰고 계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

○김성희 위원 쓰고 계시네요.

그러면 확인하셨을 텐데 MBC, 한겨레, 경향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잘하세요. 수사기관 가기 전에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거짓말하시면.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하지 못하는데요. 아까 한 네댓 군데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성희 위원 아니,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첫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띄엄띄엄 듣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으셨을 것 아니에요.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났고 경찰청에서 그 이후에 어떤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장관이 계엄에서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등등을 단전·단수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응하라고 말하는데 ‘네, 네’ 듣고 있었다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게 상당히……

○김성희 위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회의 중이었고……

○김성희 위원 청장님, 녹음하고 계시지요, 전화기?

진술 잘하세요. 하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녹음 안 합니다.

○김성희 위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단전·단수 지시 있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기억이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기억이 없는 건 또 뭐예요?

○소방청장 허석곤 선관위에 단전·단수하라는 그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국회는 어땠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국회도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민주당사는요?

○소방청장 허석곤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오로지 언론사와 관련돼서만 몇 군데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예, 상당히 빠르게 전화가 왔고 그날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김성희 위원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메모지도 있고 연필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장관이 뭔가를 말하는데 받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믿을 국민이 다섯 명은 되겠냐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래서 그 메모지를 실행도 안 뒀고 경찰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그 이후에도 제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희 위원** 메모를 하고 메모를 버리셨다고요? 증거를 인멸하신 거네요, 본인 증거지만?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방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소방청장은 굉장히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될…… 그래야지 정상적인 소방청장의 자세예요.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방청장 일상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서 그분들의 자세, 표정만 보고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방청장이 사전에 국가의 대내란 사태에 대한, 준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기억나는 것까지 최대한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라고 봐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차장이 옆에서 들은 것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듣거나 말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만약 그 후에 지시를 하셨거나 전달한 사안이 있으면 위증으로 처벌받으시게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날 회의 석상이었고 회의 석상에서 그것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을 피해 가지 마시고 그것 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방청의 다른 간부들에게 그 리스트를 불러 주면서 협조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소방청장 허석곤**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성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씨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난 40% 여론조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PPT에 보면 그 여론조사에 나온 질문지입니다.

보시면 질문지 3 여기에 대해서 보시고 이게 편향되지 않는 정상적인 질문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의 체포영장의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라고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전제적으로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불법 논란에 따른 전제하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단을 줄 수 있는 문항을…… 그러니까 예단이 들어가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전제조건이 저희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아니냐……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알아. 지금 선거 여부를 떠나서 이런 질의 자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냐 이거예요.

좋아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다음 PPT, 질문지 4항 봅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위의 전산시스템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이 질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전제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부남 위원 이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그다음 PPT 보세요.

그 전날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3% 차이가 났습니다, 하루 전에.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6% 차이가, 두 배 차이가 났어요. 이 말은 이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보수에서 과표 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은 보수세력에서 윤석열 씨의 계엄 선포 내란, 쿠데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공정한 여론형성과 공정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다음 대권주자에 대한 영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무총장님께서서는 계속 선거와 무관한 정치 성향 조사라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신데 이러시면 안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것 철저히 조사하셔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하시고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치더라도 방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뽑아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객관적인 질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그래야지만 선관위가 존재를 하고요.

선관위 왜 존재하지요? 선관위 왜 존재합니까? 선관위 존재 의미가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선관위가 존재하고 여심위가 존재하는 목적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꼭 실행에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여심위가 제대로 심의해서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이의신청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양부남 위원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행안부차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적으로는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인데 법이 시행돼서,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과도기적으로 지금 급하게 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첫째는 부모를 다 잃어버린 미성년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모를 다 잃은 미성년자들,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자에 대한 케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유족들끼리 서로 자조 공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공간이 현재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소방청장님, 지금 내란의 공범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오늘……

안 보이시는데,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정확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양부남 위원 지금 이번에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소방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치료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심리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저희들 선별하고 추적해서 끝까지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오늘 질문의 대부분을 대행님께서 답변하고 계신데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대행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란 수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도 볼 수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아주 특별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의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지는 규정에 다 있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지금 경찰법……

○**김종양 위원** 범죄수사규칙에 따라서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사건,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은 국수본에다가 특별수사 본부를 설치하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계엄 특별, 경찰 수사단의 어떤 공식적인 이름이 특별수사단입니까? 이것을 특별수사본부로 봐도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항을 특별수사단 설치 근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은 국수본부장이 단장이 돼서 총체적으로 경찰법에 의거해서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이 수사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그마한 어떤 의혹도 사면 안 됩니다. 아주 공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규칙과 관례에 따라 가지고 수사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이런 수사를 위해서 지금 경찰청 예규로,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국수본부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수사본부장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임의로 그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SNS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중수 본부장이 정칙적으로 어떤 성향이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의혹을 살 수 있는,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수사 본부는 단장이 경무관이 됩니다. 그리고 국수본부장은 단순히 보고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관례를 보는 것 같으면 국수본부장이 직접 브리핑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관 간 협조 요청까지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규정에 맞지도 않고요, 관례에 있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이것 마치고 들어가시는 것 같으면 국수본부장하고 의논을 해서 가지고 이런 오해 살 수 있는, 한 점의 오해도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규정에 어긋난 조직을 운영하고 수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곧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를 한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행께서도 오전에 답변하실 때 물리적 충돌,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찰이 사실 너무 서두르고 적극적이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체포영장 적법성에 대해서 물론 일부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체포영장이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정당한 기관에서 발부가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권한쟁의 신청을 해 놔잖아요.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과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것 보고 해도 저는 충분히 적절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다

보는 것 같으면 큰 불상사가 또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대행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께서도 여하한 경우에도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또 구속영장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가지고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이것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본부 산하의 특수단은 사실상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무관급으로 해서 수사본부장이 특별히 중요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이 관련됐을 때 일부 하는 건데 지금과 같이 큰 사건에서는,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이 구속되는 이런 큰 사건에서 경무관급이 수사단장 하는 것은 맞지를 않고요. 수사본부장이 스스로 단장이 돼서 이것 꾸러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양 위원 아니, 그것은 규정에 따라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규정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 규정은 경찰청 예규입니다.

○김종양 위원 아니, 지금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 아주 공정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범죄수사규칙에 따라서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이것은 경찰청 자체 예규에 불과한 거고요.

○김종양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충분히 지시하고 이것하고 다 상쇄할 수 있는 거고요. 전에도……

○김종양 위원 거기에 명확하게 지금 팀장이 누구라고 국수본부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그것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에도 LH 투기 할 때도 국수본부장이 단장이 돼서 특별수사본부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대행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는 말이 법과 원칙이니까 규정과 관례, 원칙에 따른 그런 수사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 대덕구 박정현입니다.

오늘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고생이 많네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말씀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42일째예요. 앞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께서도 경찰 내부의 내란 사태 주요 종사자들이나 관련자들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목현대 전 국회경비대장……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직위해제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직위해제가 이게 징계는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보직 해임인데요.

○박정현 위원 징계는 아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국회 수소충전소로 국회의원 체포조를 보낸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은 현직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현직에 있는 게 맞습니까? 직위해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강상문에게 국회의원 체포조를 지시한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이분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경찰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류삼영 전 총경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전광석화처럼 징계를 했어요. 2022년 7월 23일에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는데 불과 20일 만인 8월 12일 날 감찰 실시가 됐고요. 그리고 12월 8일 날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서 12월 13일 날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류삼영 전 총경과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목현대·강상문·오부명, 이들과 죄질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란 종사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위원회 열었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열지 않았습시다.

○박정현 위원 징계위원회 여셔야지요. 류삼영 전 총경은 무슨 사법적인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수사가 진행되면 사실은 중대한 혐의가 인정돼서 수사가……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배치는 하지 마셔야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전체적인 아직 경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전체로 같이 묶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 마셔야지요. 이분들은 들어내셔야지요,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분들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면…… 경찰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빠른……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고기동 차관님, 지금……

1분만 주십시오. 3분 켜었으니까 1분만 주십시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고기동 차관은 아니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권한대행 말씀하시는……

○박정현 위원 예,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대행이 지금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력하라고 경호처에 업무 지시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박정현 위원 그래도 행안부장관직무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도 여기 소속이고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하셔야 되지 않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상당히 고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고기동……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 대행에게 말씀하고 언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법 3조 3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김용빈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일부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내란수

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 이 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경우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정춘생 위원 경우에 따른 게…… 완전히 다른 거지요. ‘A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일을 잘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내란 전후로 해서 윤석열은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국정 수행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실시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입니다. 그 당시의 여론조사와 지금 여론조사 결과랑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걸 보고 흑세무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론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제가 말씀드리……

○정춘생 위원 이 질문…… 예,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이런 건데요.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소위 정치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고 묻는 건 아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묻는 건 아니고 서로 닮은 질문을 갖고 그 결과 수치를 전과 후 비교해서 높아졌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여론조작이라는 겁니다. 여론 조성·조작이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권한 밖의 영역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춘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쭙본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체포영장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업체는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성국TV로부터 다수 의뢰받아서 지금까지 다른 여론조사 업체와는 튀는 결과를 많이 냈던 업체입니다. 이걸 갖고 너무 기뻐하신다면 상황을 잘못 판단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PT 보아 주십시오.

그 결과 응답률을 좀 보면 Gallup에서는 16.3%, 여론조사꽃에서 14%인 반면 공정에서는 응답률 4.1 그리고 한국여론평가연구소인가요? 여기서는 4.7%로 나옵니다. 응답률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조사를 보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명태균,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이

각종의 선거 과정에서 그 선거와 민심 그리고 표심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우리가 많이 봐왔고 얼마 전에 수사보고서가, 발표된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서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 결과들을 다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번 조사들은 국민의 여론 조성을 조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대한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득표율 간의 격차가 클수록 유행하기 쉽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2, 제3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무총장님, 알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선관위는 여론조사 조작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정춘생 위원 본 위원 역시 여론조사의 오염을 막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걸 갖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SNS 감별법이라고 호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 음모론, 아무리 선관위에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증명을 하고 아무리 시연을 하면서 다 해도 안 믿고 설파해서 결국에는 계엄까지 오게 된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위…… 윤건영 간사님이시네요. 행안위에서도 이 법을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청장대행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배준영 위원 지금 국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요 한남동에서 체포영장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가,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번 물어보셨지만 안전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으로서 한번 각오를 밝혀 보십시오. 직을 걸고 이번 에 다치는 사람 없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개인적으로나 직무대행으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혀 원치도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체포영장의 집행은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데 국수본에서도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



서는 국수분에 신뢰하고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무안공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청장대행님께 지난번에 제가 무안에 갔을 때 유족 대표가 악플러에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경찰에서도 단호한 대응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계속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고기동 대행님, 제가 이번에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 항공사고를 보니까 이게 대규모 참사인 데다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가동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도 도출이 될 것이고 경찰에서도 무안공항을 26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과연 기체 결함은 없었는지, 조류 퇴치는 제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과 관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외국 전문가는 이게 범죄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흔하지 않은 둔덕 형태의 안테나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가 인천공항이라서 공항을 돌아보니까 조류퇴치팀이 46명이 되고 인건비 빼고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4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특별한 3개 지역, 철새들의 먹이가 많든지 휴식을 하는 곳은 관리를 하고 있고 염충 같은 것도 있고 레이저건도 있고 소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조류가 동서로 가로지르면 항로에 문제가 되니까 남북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인천공항은 사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사위원회하고 경찰 조사만 갖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까지 발굴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지 특별검사가 나서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칸막이를 다 뛰어넘는 종합적인 조사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전을 최고 책임지시는 고기동 차관님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경찰에서도, 직무대행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우선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사항들은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항공기 사고는 국제기준 ICAO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더 공정하고 또 유가족 뜻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조금 더 진전된 방안들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 운항 혁신이 필요한데 그 전체적인 것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정말 안심하면서 우리 항공기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예, 충분히 경찰에서 완벽하게 다 밝혀낼 수 있어서 추가적인 다른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 차장입니다.

현재 수습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남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시 본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공정하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하다, 아니다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차장님, 범인은 반드시 검거돼야 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국정 공백, 국정 혼란 상황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지금 어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영장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직까지 보시지 못했다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왜냐하면 제가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아니, 언론에 나와 있고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장이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영장을 보게 되면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내란……

○위성곤 위원 그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지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언론을 통해서 안다라는 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영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혼란스러운데…… 차장님께서 영장을 숙지하시고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권력을 분명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요. 그것도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알고 있adian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니, 위원님께서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그 사건을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인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그것은 원론적으로 반드시 검거가 돼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범죄자가 지금 한남동 관저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범죄자의 도피·은닉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법 151조 범죄은닉죄로 그들을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체포 진행 과정에서 국수본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하고.

○위성곤 위원 법률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되어진 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국수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형법 제151조는 벌금·금고 또는 징역에 처할 범인임을 알면서 이를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서 유혈 사태라든가 충돌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민전 의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으로 불리는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권력에 대한 대항을 선동한 점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와 평화적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권력 간 갈등을 해결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 저항하려고 맞서려는 단체를 지지하거나 주선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소위 반공청년단의 백골단, 그것은 사실상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위배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결성을 하고 있으면 범죄단체 모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구체적 사항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은 국수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찰청에서 김민전 의원 등 반공청년단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에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태균식 선거 여론조사 관련해서 많은 여론의 왜곡이 있다, 여야 위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작년서부터 마련 중에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상당히…… 공표나 비공표나,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언론지에 대해서는 소위 신고 면제가 돼 있어서 사전에 설문지 조항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할 수가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일단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뵙고 만약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신고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관련된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신고한 것만 하고 있지요? 전체적인 여론조사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냐하면 이것 선거만이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인 거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선거제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신고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신고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없게끔 하는 적극적 조치들의 방안들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인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대여섯 가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위성곤 위원 개선 방안은 제가 확인했고요. 많이 미흡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 그렇습니까?

○위성곤 위원 다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것은 차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지금 두 번째, 2차 질의인데요. 2차 질의에는 경호처·경찰·공수처 어떤 공직자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탄핵 찬반하는 국민은 그 누구도 작은 부상이라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한 집행을 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내란죄 적법 절차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에 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대행님, 야당 대표께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대답해 주세요. 재판 진행 중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한테……

○이달희 위원 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모르시는군요. 재판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야당 대표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받는 많은 범죄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되고 난 뒤에도 재판을 계속 받나요, 아니면 형사소추되지 않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내란죄는…… 무죄추정은, 이재명 대표는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데 야당 대표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 문제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우리 온 국민이 아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본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이달희 위원 그러면 내란죄는 무죄추정 원칙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적용이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돼야 되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내란죄의 범죄자가 되겠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헌법재판소 탄핵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달희 위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내란죄 죄인으로, 아무리 현행범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앞이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생긴 이래 정말

전 국민이 처음 겪는, 공직사회도 처음 겪는, 이 자리에 없는 조지호, 김봉식 그런 공직자들이 쓰나미처럼 지금 구속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한 절차를, 거리에 있는 탄핵 찬반 이런 분들이 다 수궁이 되려면 법대로 하지 않고는 우리 공동체의 희생만 따르고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 차곡차곡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외지요? 여러분이 가실 거잖아요, 야당 위원도. 내란죄를 지었는데 내란죄의 결정은 헌재에서 내란죄 빠라 하니까 소추 안 된다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그것 아니라도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수용하더라도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양쪽……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의 외침, 저희들이 나가서 인터뷰해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대통령의 죄를 그리고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없다도 따져 보는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한나라당 정형근, 2004년 이인제, 2004년 민주당 대표 한화갑,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1분만 더 주세요. 3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2000년 한나라당 정형근, 2004년 이인제, 2004년 민주당 대표 한화갑,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사연으로 체포영장에 불응해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법 판단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한 명을 체포하겠다고 마약 수사하는 수사대, 형사기동대 일하던 것 다 멈추고 여기에 1000명이나 풀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꼭 체포해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결국은 재판 과정, 기소할 수 있고 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될 수 있고 재판 다 받을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저는 지금의 엄중한 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언론 자료를,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쪽 내용 중에 핵심을 보면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폭력을 이용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쪽 하면서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람’ ‘충돌 방지를 위해서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오전의 질의에서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이야기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의 이와 같은 지시가, 이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각도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교묘한 방법으로 중립을 취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후세의 평가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기동 차관님, 차관님은 국무위원은 아니시지만 국무회의는 참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거기에 또 여러 다른 부처에도 몇 분 대행들이 참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이상식 위원 제가 보기에 경우에는 따라서는 윤석열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의견 개진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셨듯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필요하면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경찰도 있고 그래서 직무대행께서 중요한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명의 여당 위원님께서 수사체계 문제 삼으시고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하시고 또 왜 굳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미 수사, 불구속 수사하면 되지 꼭 체포를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꼭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여러분, 어떤 정권입니까? 어마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불공정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달희 위원님, 지금 압수수색·체포·구속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야당 위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수감도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부하들이,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들이 9명이나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죄 없는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가지고 철조망 뒤에, 담벼락 뒤에, 차벽 뒤에 숨어 가지고 부하들은 사지로 내몰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루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윤석열에 대해서 경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미 적법하게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윤승영, 잠깐만 일어서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수처가 주도했다 그리고 경력은 경찰이 제공했지만 경찰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우중수 본부장님에게 좀 전달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지휘관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 현장에 임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제 견해입니다. 제 제언인데 제 생각에는 저쪽에서는 부장검사가 나오면 우리 쪽에서는 우중수 본부장이나 안보수사국장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과감하게 법을 집행하고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내통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에서 나온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꼭 우중수 본부장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아까 주질의에서 비교형량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고 48시간을 구금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를 하면 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진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위험성은 뭐냐? 물리적인 공권력의 충돌 위험성…… 충돌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사전의 대비, 아주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완전히 멈춰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충돌 위험성 그다음에 불과 50m 간격으로 경찰에 의해서 차단되어 있는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하는 세력, 우리 국민들의 충돌 가능성……

아까 백골단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체포조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의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 한 1000여 명을 대기시키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직무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 공문 좀 저한테 꼭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릴 때 현상의 유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저는 절차와 형식 그다음 권력 배분의 현상의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지금 101·202경비단, 22경호대장한테 적법 근무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 공문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101단은 대통령실 및 인근의 경호·경비를 위해서,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202경비단은 경호행사 및 특정 지역의 안전활동과 집단시위 초동조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서울경찰청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경찰에서 경호처에 나가 있는 치안감들…… 그 직책이 뭐지요? 수사조정관인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관리관, 경무관입니다.

○**조승환 위원** 경찰관리관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서 운영되던 부대입니다. 저는 이 부대를 영장 집행을 막는 데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지휘계통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경찰 가족들, 직원들, 간부들을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공수처에다가는 57명의 파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영장 집행에 대한 중립적인 차원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청 사무분장 규칙은, 경호처장이 지휘 감독하는 건 2018년 6월 18일 날 폐지됐고요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임무를 수행해서 그 부대가 나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관계로 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서울청…… 예, 알겠습니다. 서울청장의, 2018년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관행, 현상의 유지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달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기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는 다 각기 고유의 임무들이 부여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식으로 영장 집행에 파견할 것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원래 그 부대가 맡은 임무가 각기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입니다. 그렇고 그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국수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파견 절차 없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체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파견 절차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조승환 위원** 파견 절차 필요 없다? 예.

그런데 영장의 집행은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법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영역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 집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또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릴 수밖에 없고.

정말 대통령 체포해서 48시간 구금하고 수사해서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면 결국은 1000명 동원해 가지고서 대통령 잡아가는 쇼 하는 이런 형식이 만들어지는 체포영장 집행, 이것 정말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국가기록원 이용철 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잠깐만 멈춰 주세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입니다.

○채현일 위원 지난 12월 10일 날 공수처로부터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을 받았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뭐니까?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공수처에서 폐기금지를 요청한 기관 중에 헌법기관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헌법기관과 협의하도록 우리 기록물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협의 절차를 거치느냐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난번 이태원 특조위 때도 2024년 7월 달, 10월 달에 폐기금지 요청을 그 당시에 했는데 5개월 후에, 12월 달에…… 지체를 했어요. 그러면 기록물이 남아 있겠어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수처 건도 실제 저희가 예상한 것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지난 것이 폐기금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채현일 위원 아니, 1년이 지나야 폐기 심의 대상인 건 아는데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보존된 기록물에 한해서 관리 부담이 되니까 보존할지 말지 그 폐기고요, 이것은 지금 보존조차도 안 되는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란 사태가 있고 나서 국방부 같은 경우도 보도에 따르면 육본하고 지작사에서 합참으로 돈 포고령 문건도 팩스 받았는데 그다음 날 파기했다 그러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쪽지도 실제로는 버젓한 문건이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파기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일주일 동안 18개 기관에 대해서 현장점검했잖아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저희가 점검하는 대상은, 주로 기록물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채현일 위원 지금 너무 안이하십니다. 지금 기록물 같은 게 폐기가 되고 은폐되고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특조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같은 내란 상황이면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금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 중에서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은 출석을 거부했지

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만약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현일 위원 만약 그때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 또 관저 출입을 방해하는 제삼자—국회의원을 포함해서—그런 경우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그건 아까 차장님께서 답변한 걸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현행범이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현일 위원 뭘 상황입니까? 당연히 현행범으로, 원리 원칙대로 대응을 해야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집행돼야 한다고 본인 스스로 공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란수괴 피의자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수본이나 경찰청에서, 내란죄 수사하는 주무 부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알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조금 남았네요.

잠깐만요. 또 한번 나오십시오.

아까 소방청 관련해 가지고 단전·단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 당시에 이 내용이 있었나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그건 제가 수사 통보나 보고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채현일 위원 만약에 없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왜 그러냐면 몰랐던 사실이, 중요한 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수·단전 조치를 진짜로 시도를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억을 못 한다 했지만 질문하면 하나씩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진실을 밝혀야지 소방청 차원에서 그런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누군가 본인도 모르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퇴직급여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옹혜인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내란 주요행위 종사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뉴스 보셨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옹혜인 위원** 이게 이미 신청서가 들어와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알아서 했던 것 같다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 중이에요. 이 신청이 만약에 진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 거라고 하면 이 신청서 심사는 기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그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만약에 본인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옹혜인 위원**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요 장차관급이 퇴직한 뒤에 퇴직급여 신청하는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심지어 퇴직 후인데—부처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옹혜인 위원** 그리고 재직 중에 내란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됐다고 하면 퇴직급여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진행 중에는 지급 중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알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고기동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이거 뉴스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봤습니다.

○**옹혜인 위원** 나랏돈 축내는 벌레 아니다, 악성 댓글에 너무 상처받았다라는 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급한다고 발표된 뒤에 나온 뉴스입니다.

제가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매번 행안부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참 3년째 안 바뀝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권이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이런 것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상금액만 어디 광고하듯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들이 달리고,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자고 최근에 나온 사참위 보고서에서도 내용을,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장관은 이 사참위 권고사항 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 정부 여당은 각시탈을 쓴 누가 참사를 만들었다 같은 이야기나 이곳 행안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프레임 전환하려는 것처럼 지원금 액수를 자 극적으로, 장례지원비 얼마다, 몇천만 원이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고 그때 지원금 반대 국회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옹혜인 위원** 그리고 제가 행안위에서 벌써 3년 차인데요. 국정조사 때도 이 얘기를

하고 현안 질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늘 피해자들에게 반복되는 악플을 만들어 낸다라는 말씀을 정말 매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차관님이 직접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이후에 피해 보상금 일절 사회에 알리지 않았습시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 온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면서 그거 그렇게 꼭 생색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피해자들 지원하는 것들 굳이 금액을 이렇게 공개해서 어떤 악플이 달리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없앨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보다 섬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관련된 매뉴얼을 좀 변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이 경우는 국비라는 표현이, 얼핏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들이 내신 성금을 요청이 있어서 나눠 드린 건데요. 보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섬세하도록,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옹혜인 위원** 유가족들의 편에 서서 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매뉴얼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월 4일 계엄 그 새벽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이 국회에 2대, 공관촌에 1대 그리고 대통령실 국방부에 1대, 총 4대가 그 새벽에 출차를 했어요. 이거 서울경찰이 요청해서 나간 거다라고 답변받았는데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옹혜인 위원** 몇 시에 요청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제가 시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옹혜인 위원** 뒤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 시간 멈춰 주세요.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 0시 41분에 요청받았습니다.

**○옹혜인 위원** 0시 41분에 요청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 예.

**○옹혜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해당 요청이 왔던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 IT 부서에서 연락받았다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옹혜인 위원** 오늘 단전·단수 이야기 나왔는데 혹시 통신 끊고 국회랑 공관촌이랑 대통령실이랑 군경이랑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해서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소통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 장비는 주로 인파가 모였을 때 저희가 무선망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별도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통신이 원활하게 안 될 때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장비입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그런데 별일 없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이 이동기지국들이 그 새벽에 나갔다고 하는 건 통신을 끊고 그 상황에서 군과 경과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장비가 항상 인파가 많은 곳에 나가서 지원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용혜인 위원** 인파가 많지 않은 곳에 나갔잖아요.

경찰에서 이거 어떤 사유로 나갔는지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용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방금 용혜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통신망 심야에 이렇게 출동했던 사유라든가 그 경위 이것을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은 계엄령이 소위 말해서 피해도 입지 않았다 내지는 잠시 동안 국회에 겁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사실 하나하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아 보면 정말 이 계엄령 자체가 그냥 겁주기식 계엄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무색하게 하는,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들어서 이 문제가 정말 현실에 또 사실에 부합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이나 행안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구로율의 윤건영입니다.

소방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진실을 물어봤는데 소방청장께서는 여전히 답변하는 거에 있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청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이상민 장관과 통화 내용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자료가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께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3일부터 4일까지 소방청장이 통화를 누구랑 했냐, 통화 내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맨 밑에 줄 보면 소방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해서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합

니다.

이게 뭐니까? 주무 부처 장관인 행안부장관이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국회에 버젓이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즉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은 12월 3일 날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예요. 최소한 소극적 동의, 소극적 참여를 하신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또 하나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청장님?

12월 4일 날 소방청장은 차장에게 지시를 내렸지요?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기억납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12월 4일 날 말씀하십니까?

○윤건영 위원 예, 이 다음 날이요.

○소방청장 허석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윤건영 위원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차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입단속시켰어요. 도저히 기억 안 납니까? 소방 차장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대질해 볼까요? 기억 안 나요? 이것 청장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제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니다.

○윤건영 위원 차장한테 입단속시키라고 지시를 안 했다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윤건영 위원 그러면 차장이 청장 지시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던 십여 명 이상에게 일대일로 찾아가서 맨투맨 입단속,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단속 안 했다고요, 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예.

○윤건영 위원 차장이 입단속 안 했다고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윤건영 위원 청장의 지시가 있으니 차장이 움직이는 거지요. 이것은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셔야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 이후에 계속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논란에서 비켜 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차장에게 그것을 지시하거나……

○윤건영 위원 청장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소방청장으로서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윤건영 위원 그런 불편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당장 아니라고 하셔야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그것은 저 혼자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 혼자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언론사 단전·단수가 하찮은 일입니까! 그리고 국회에 이런 보고를 왜 합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서 행안부 경찰국장,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경찰들은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청장은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단수가 있을 때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찰 간부 여러분들 중에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던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건 다 기록에 남을 거고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민 장관의 일탈입니까, 청장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주범이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대명천지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소방청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라니요? 소방청장의 순간적 판단 착오가 또는 판단 실수가 또는 판단 미흡이 소방청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걸 씌웠습니다.

제가 오전 발언에서 소방청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위원님……

○윤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도 다시 한번 윤건영 위원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경찰청의 관련 공무원들, 이호영 차장을 비롯한 배석한 경찰공무원들 중에서 언론기관의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 내지는 논의 아니면 언급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옹혜인 위원 소방 간부들 중에 안 계세요, 그날 회의 같이 하셨던 분들?

○위원장 신정훈 소방청 관련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사실을 들었던 분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배석한.

○윤건영 위원 집단적으로 숨기고 있네요, 집단적으로.

○위원장 신정훈 진실은 영원히 덮여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불의한, 권력에 의한 쿠데타의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의무, 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협조하는 것이 그래도 여러분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이호영 직무대행님, 아까 발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그만큼이나 기관 간에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불상사에 대한 예방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수본에서.

○이만희 위원 최상목 대행은 현재 시점에서는 경찰청장직무대행에 대한 상사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영장 집행은 오로지 국수본하고 공수처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절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까 1차 집행 때는 57명을 파견 형식으로 법적인 불일치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1000여 명이나 동원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파견 조치가 없습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현재까지는 국수본의 요청이 없고요. 정당한 법 집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 과정에 무리한 시도로 인해 가지고 결코 어떤 불상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그 책임도 이호영 직무대행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을 전체 다 지휘하는 경찰청장의 직무대행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하여튼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저도 국수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또 한 가지요,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들에 의해서 나와 있는 민주당 의원님, 여기 나와 있는 이상식 위원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국수본의 수사 내용이 굉장히 오염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그것 수사 중이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국수본에 있는 근무 직원들이라도 경찰청장께서 지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직무 내용들은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누구와 같은 대화를 나눴고, 어떤 내용을 나눴고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있을 아니면 있을 수도 있는 경찰의 그 관련 수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 자체적으로……

○**이만희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 발언들 많이들 하시는데 본인들의 기대 또는 예상했던 바하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작된 여론조사다’ 또 ‘명태균식 여론조사’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듣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그런 내용 자체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가 만약 불편부당하고…… 잘못된 거라면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정선거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이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의구점을 해소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에 북한의 해킹 우려가 있다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또 다른 취약점은 뭔지를 밝혀내고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투표의 우려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벌써 제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그게 단순한 홍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그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더 노력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만희 위원** 부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직무대행님, 지금 민주당에서 부정선거라든지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속된 말로 모두 수사 대상으로 놓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카톡을 사찰하고 여기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요.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 소방청장님,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방청은 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도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넣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지난주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캡처 사진 280개 분량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삭제된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전체 분량은 정말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언론 인터뷰 답변서를 보내면서 방향을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명태균 씨는 윤석열 내외에게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에게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던 윤석열의 말은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이번 조사 결과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런 게 바로 부정선거고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공표는 소수의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구성요건에 충족되는 것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판례상 그렇습니다.

○**한병도 위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타인에게 전달을 했다면 그 또한 선거법 108조 위반인 것도 맞지요? 타인에게 전달하면 선거법 108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활용이 됐다는 사실은 그 당시 정책총괄실장으로 일했던 신용한 교수의 공익제보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윤석열·김건희·명태균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가 나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서 위반 내용이 밝혀지면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지금 공표에 대한 부분인데 넘겨줬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넘겨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인하고의 사이에 서로 공모 관계에서 자료를 주고받는다든 그런 부분은 유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걸 보다 더 상세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병도 위원** 그 캠프 전체에 전달이 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지금 공모 관계에 있는, 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인이 돼 버려 가지고 그게 내부적으로 비밀보안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상황의 특정인이라면 유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병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를 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병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수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번에 선관위에다가 ‘내란의 수괴는 이제명입니다’ 하는 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당시에 이거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냐 아니면 사실의 적시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선관위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짜 내란의 수괴는 이제명입니다’ 이 내용이 국민 일반에서 봤을 때 단순히 의견의 표명이다,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와 단어를 써 가지고 공당의 대표를 이렇게 범죄자로 특정하는 이런 플래카드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히 의견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가 그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시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 기준,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운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 기준을 마련했는데 가급적이면 현대적인 정당정치,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특별히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다 풀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건에서 그 앞의 부분,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위원장 신정훈** ‘내란의 공범’하고 ‘내란의 수괴’하고 규정하는 범위나 정도 이게 대단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위원장 신정훈 소위 말해서 ‘내란의 수괴’는 특정하는 거고 ‘내란의 공범이다’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어떤 식의,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한다는 허위사실 이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그 용어를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저희들이 봤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저희 선관위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은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규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기준이 특정한 부분으로……

○위원장 신정훈 좋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하고 또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선거법 내지는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외에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아주 크고 또 정당법에 의해서 관리돼야 될 기준에 있어서도 저촉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큼니다.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이런 기존의 한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정당의 문화라든가 정치 문화에 순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역기능을 하는 그런 경향들 그리고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심대하게 훼손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좀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하고 또 논의해 보실 의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조금 더 연구는 해 볼 텐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건과 관련해서, 내란 공범과 관련해서 정연욱 의원님께서……

○위원장 신정훈 제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때 다시……

○위원장 신정훈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이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기준을 더 별개로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위원장 신정훈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다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클리어하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중립성 시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부분 규제에 맞으니까 허용하고 어떤 부분은 이걸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규제하겠다고 그렇게 스탠스를 취해 버리면 오히려 더 불명확성 때문에 그런 시빗거리를 제공할 여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사무총장님, 저희에게 해당되는 기준만 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

례와 같이 특정하는 이 범위가 대단히, 좀 더 좁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시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장 신정훈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분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신정훈 차관님,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본회의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게 된 그 경위는 파악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일단 우리 의정관이 그날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했 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 신정훈 사후적으로 조사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용산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과연 국무회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회의록이 없었다는 것 외에, 단지 회의록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서해야 될 장관들이 다 소위 말해서 서명하는 데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야 될 의무가 행안부에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경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만 빠져나가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번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현저하게 위반한 내용 중에 국무회의가 단지 회의록이 없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방금 차관 말씀대로 이 회의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민 장관이 이 회의록에 서명하라고 권유한 그 장관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는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 자리에서 나가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회의록 작성의 주무 기관인 행안부장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런 사실관계조차도 파악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저회가……

○위원장 신정훈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장관은 뭐라고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장관님께 여쭙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곧 있다가 사임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신정훈 그러니까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최소한 장관한테는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회의록을 관장할 수 있는 그 당사자가, 의정관이 소위 말해 행안부 공무원인데 행안부장관이 현장에 있었던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무슨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배석해 있는 의정담당관 일어나 보세요.

그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관련 자료 요청을 위해서 공문을 요청해서 공문을 받았고요. 거기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그때 메일로 요청……

○위원장 신정훈 그 외에는 없었지요?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예.

○위원장 신정훈 메일 보내 가지고 답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답변이……

○위원장 신정훈 메일도 그냥 어떤 방식으로…… 메일 내용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답변이 온 분도 있고 안 온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어떤 메일을 보내셨느냐고.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참석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것 종합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거기에……

○위원장 신정훈 몇 분이나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열한 분인데 그중에서 특정특정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김상춘 예, 특별한 내용이 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답변이 와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됐습니다. 앉으세요.

혹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이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했던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예.

이만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만희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이호영 직무대행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시간은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 신정훈 질의요?

○이만희 위원 예, 이것 시간을……

○위원장 신정훈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손을 한번 들어 주세요.

3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호영 직무대행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 관련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영장 집행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동원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거론되는 얘기로는 수천 명이 동원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실질적으로 이 개별적 사안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만희 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것 보고하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법 14조의 6항 단서조항에 보면 중요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조금은 특화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찰청장께서는 국가의 전체적인 사항을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은 사안이고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휘하겠다고 할 수는……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말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까? 공수처 경찰력이 형사가 마약수사대, 무슨 수사대 할 것 없이 천여 명이상이 동원된다고 하는데 그걸 협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수본에서 고심 끝에 인력을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적어도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비록 직무대행이시지만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가수사본부라는 그 뒤에 숨어서는 안 되고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어떻게 하면 이 영장 집행의 실효성도 만들면서 양방의 충돌을 방지할 것이냐,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없게 할 것이냐. 권한대행의 지휘 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면 그것 말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유념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잠깐 나왔습시다마는 대통령께서 ‘2차 영장 집행이 있으면 총기를 사용해라. 안 되면 칼이라도 사용해라’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시다. 가짜뉴스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제가 관저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을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만희 위원 전 국민에 대한 카톡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카톡 계엄과 같은 내용들을 그냥 용인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위원 청장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위원장 신정훈 정리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유념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청장님, 청장님 답변 중에 법과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원칙이 뭘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요?

저는 우리 경찰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의사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또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렸고 그 법치주의 중에 공권력이 무력화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결국 치안 공백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관할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상 대응 및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강조합니다. 경호법에서의 위해행위를, 체포영장을 대거나 수사를 받는 것까지도 위해행위라고 호도합니다. 그리고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포영장이 불법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법원에서 발부되어진 법치주의의 근간 자체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충돌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검거하지 말아라, 솔직한 속내는 그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재판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저희들은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가 아니라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저희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수본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국민들은 고통 속에 있고요. 외국에서 한국의 신인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자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지질하고 못났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마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청장대행님, 지금 사실 저희는 정말 걱정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내일 또는 모래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글썄요, 청장대행님께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체포영장이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이게 계선상으로는 직속 상관일 텐데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언론에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경찰청 병력 외에 소방청에는 연락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부딪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소방청도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소방청에 연락하셨습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아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니까? 국수본에 다 맡겨 놓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체포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 영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국수본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할 겁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관여하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어떤 걸 관여해야 됩니까?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보낸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그건 제가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했고요.

○배준영 위원 용인을 하고 허가를 하시고 그걸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국수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님, 제가 지난번에 비방을 하지 말라던 여야가 공히 비방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양쪽을 다 허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내란 공범이 되고 민주당 대표도 내란수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양쪽을 다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운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해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넓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 현수막으로 발라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하려면 그 법부터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행안부차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 그냥 육성으로 묻겠습니다.

이건 위성곤 위원님이 물어보셔도 될 법한 질의였는데, 지금 사실 무안공항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주항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왜냐하면 제주항공이랑 제주의 어떤 안전의식이라든지 민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9·11 테러라고 그러지 맨해튼 테러나 뉴욕 테러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참사의 공식 명칭을 할 때 12·29 참사라든지 이런 게 공식적으로 정해져야지 무안 주민들도, 제주 주민들도 상처 안 입고 같이 중립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국토부랑 협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본질의와 보충질의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못 하신 이해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 5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외신기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때 외신기자 25명이 왔는데 외신기자협회 회장, 산케이신문 지국장이예요. 뉴욕타임스 지국장, 교도통신 지국장, NHK, 아사히, 마이니치, BBC, 로이터, CNN 등 이렇게 여러 외신기자들이 왔는데 그중에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 기자가 3명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진짜뉴스 발굴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신화통신은 관영 매체로 사실상 첩보기관 역할을 수행해서 특파원들은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고 대화 내용은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미국 국영방송 VOA(Voice of America)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반미친중, 반중친미 세력 간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비밀 회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Voice of America는 미국에 있는 관영 Voice of America가 아니라 VOA Korea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보도를 한 게 아니고 패널 간 토론 와중에 일부 패널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해 가지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리고 이것을 주선한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주선한 사람이 이언주 최고위원과 산케이 지국장, 아까 얘기했던 외신기자 클럽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도 그분들이 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 당이 이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대행, 혹시 알고 계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고 계시지요? 철저하게, 이것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런 가짜뉴스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라는 게 있어요. 신인균의 국방TV가 극우 유튜버로 매우 유명한 채널인데,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었던 날 선관위 사무총장님, 선거연수원에 98명의 직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96명입니다.

○**이해식 위원** 아, 96명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96명의 직원들이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군인들이 들이닥쳐 가지고 계엄이 선포가 되는 바람에 일부 신문에서 민간인이 억류가 됐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스카йте일리라는 일종의 극우, 이 신문도 참 제가 볼 때 굉장히 황당한 언론이라고 보여지는데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90명 중국인 해커부대가

누구인지 밝혀야 된다' 이런 요지로 칼럼을 썼습니다. 기억 혹시 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해식 위원 그래서 이 칼럼을 계기로 해서 또 극우 유튜버 보안사라는 게 있는데, 나옵니다, 보안사에서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 수십 명이 계엄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주장을 했고 정보사 블랙요원 HID가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공산당 전산 요원 90명이 미군 정보 당국에 이송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카이드일리가 계속 부정선거 주장을 하던 매체인데 1월 스카이드일리의 기명 칼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어떤 팩트체크를 할 필요도 없는…… 그 96명이 중국의 해커 부대가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 연말에 이 부분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렸듯이 연수 중이었고 그다음에 시사IN 그 부분에서 무전기를 들고 통제를 했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직 직원이 주차 관련해서 3층에 올라가서 주차를 좀 바꿔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고 현장에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엄군은 아예 청사 바깥에 있었지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경찰이 통제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고 내용에 잘못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1월 7일 날. 하다 보니까 5명의 인원은 후에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시비가 붙었지만 그냥 청사 안으로 연수생들이 들어갔고요. 그 대신 6명의 인원은 들어가지 말라는 통제를 받고 그냥 청사 안의 연수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확인은 했고요.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식 위원 경찰에서 이것도 고발이 돼 있으니까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좀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됐습니까?

오늘 장시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의를 마치면서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 앞으로 있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영장 집행,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되고 또 불상사가 없어야 되고 또 민이든 관이든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사상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만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돌까지를 불사할 수 있느냐, 충돌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행안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이 문제가 절대로 불상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만히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공직자들의, 경찰 병력이든 경호 병력이든 간에 안전이 위협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걸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서로 충돌되었을 때 저는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과 공권력이 저지되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 양자가 충돌한다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권력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불가피한 불상사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그렇다 해 가지고 양자가 소위 말해서 그런 불상사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아예 그냥 그걸 해태한다면 그것도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공권력이 집행되지 못하는 선례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사법적인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하고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체포하면 국정에 심대한 타격이 있으니 이걸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는 국가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오늘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경찰청장이 보석 허가를 신청했는데 항암 중인데, 투병 중인데도 보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부장관은 내란의 주범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것이 오늘 이 회의 석상에서도 또 하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행안위가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이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만 또 공권력이 장기간 정지되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찰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면 공권력을 장시간 방치해라 이런 취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수갑을 채워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정말 당당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니면 체포영장이 나오기 이전에 소위 말해서 출석요구에 대해서 응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야기를 충족시키는 가장 최고의 해법은 지금이라도 용산에 은거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들이 다 임명했던 공직자들일 테고 또 본인이 그토록 주장했던 법치주의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할 텐데 정말 경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격도 추락하지 않고 불상사도 나지 않고 또 정말 국민 내부의 내전과 같은 그런 충돌도 없을 테고, 저는 그런 해결책을 위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정말 불상사 없이 원만히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경찰청 차장께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불상사 없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회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윤건영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누구입니까? 행안부차관님?

○윤건영 위원 경찰청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경찰청.

경찰청직무대리, 차장님, 이번 회의 끝났다고 해 가지고 느리게 빠지 마시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예, 해당 기능과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배준영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기관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 ○출석 위원(22인)

김성희 김종양 모경중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디지털정부정책국장 김희수

경찰국장 박현수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세영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의정담당관 김상춘

정책기획관 임철언

기획재정담당관 박성민

정부청사관리본부(소속기관)

본부장직무대행 박종현

대통령기록관(소속기관)

관장 이동혁

###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기획조정관 도준수

경비국장 임정주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형사국장 유재성

사이버수사심의관 홍석기

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고영국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보건안전담당관 정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선거1국장 윤재수

법제국장 도희락

선거연수원장 김대일